



## 5.30 범국민대회 열사 정신 계승!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일시: 2009년 5월 30일 오후 4시 장소: 서울시청 앞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현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Left21.com

2009년 5월 29일 | 호외

# 리포트21

#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수많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연민과 상실감을 느꼈다.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속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난 이명박 정부 아래서 커져이 쌓인 분노와 원한이 녹아 있다.

취임 직후 맛닥뜨린 거대한 촛불항쟁 속에서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방패와 몽둥이, 거대한 차벽과 명박산성으로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이명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수많은 이들의 슬픔마저 가로막고 짓밟았다. “경찰 버스로 막아 주니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다”며 덕수궁 돌담길 속으로 몰아넣고 시청 광장도 폐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도 막고 만장도 들지 못하게 하며 ‘계엄장’을 만들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봐 정말 걱정”(한나라당 안상수)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는 명박산성을 더 높이 쌓아 올렸다.

국민여론의 75퍼센트가 시청 광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지시한 “한 치 어긋남없는 예우”는 한 치 어긋남없는 경찰 차벽이었을 뿐이다.

### 이명박이 만드는 나라, 정말 싫다

국민장을 치르는 것을 두고 “세금 아깝다”고 한 변희재 등 뉴라이트들이 이명박의 진정한 속내를 보여 준다. 이명박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미래상은 저와 똑같다”고 한 바 있다.

그 미래상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염원하는 민주주의, 개혁, 진보와 완전히 어긋난다. 이런 염원을 철저히 파괴한 잿더미 위에서 만들려는 비민주적·반역사적인 ‘재벌천국 서민지옥’이 이명박이 꿈꾸는 미래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뜻이 ‘국민 통합’이라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것은 정말 역겹다. 따라서 이명박이 봉하마을에 보낸 화환이



이명박 살인정권 전직 대통령이 죽을 정도면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산산조각난 것도, 인터넷과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이명박 탄핵 서명’에 수십만 명이 동참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역주행을 끝장내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전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정부가 노동자·서민에게는 어떻게 할지 말해 뭐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때문에 실질 실업자가 3백40만 명을 넘어섰고 수백만 명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있다. 기업주들에게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수백 가지의 규제를 풀어 주는 정부가 노동자들더러는 임금을 줄여 고통분담에 동참하라고 요구한다. 지난 1년 동안 재산을 4억 원이나 늘린 이명박이 몇만 원 임금 인상 요구를 비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년 더 비정규직 하고 잘리라’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6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삼질에 방해되는 건 모조리 걷어 내겠다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속에 용산에서 철거민 다섯 명이 불에 타 숨졌다. 검찰은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고 법원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

‘4대강 정비’라고 이름만 바꾼 대운하를 다시 강행하며 여기저기서 삼질하고 있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생태계가 파괴될지 모를 일이다.

이런 역주행에 맞선 저항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주의 역주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체포하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문시위꾼’이라며 줄줄이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어제(5월 28일)는 촛불을 대변해 온 ‘고대녀’ 김지윤 씨도 긴급 연행해 갔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겠다는

기세로 ‘마스크법’도 만들려 한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어디서든 나올 수 없게 언론도 장악하려 한다. 이명박이 ‘속도를 내려’고 주문한 언론 악법은 모든 언론과 방송을 조종동처럼 만들려는 법이다.

범민련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등 박물관에 가야 할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이용해 진보적 활동가들을 마녀사냥하는 데도 혈안이 돼 있다.

대법관 신영철의 촛불 재판 개입은 과거로 회귀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가증스러운 역주행과 반동, 죽음의 행진을 끝장낼 강력한 항의 행동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개혁,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투쟁하자.



미국의 대북 압박·무시가 낳은 위험한 북한 핵실험

# 대북 제재와 강경 대응은 재앙을 키울 뿐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그 여파는 한반도의 심각한 불안정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끔찍한 전쟁 경험을 직간접으로 겪은 남한 민중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이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한 대가라는 점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대북 강경 정책이 불러온 결과다.

이미 미국의 대북 압박은 1994년에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른 바 있다. 제네바 합의 이후 잠시 위기가 지연됐지만, 부시 정부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해 핵 선제공격 대상에 올리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네오콘들은 “우리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쳐 부렸다.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여름 무렵부터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마지못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밀어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핵·미사일·인권 등을 빌미로 압박을 지속하면서 6자 회담은 큰 진척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장 선언을 한다.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아내려는 계산이었다. 미국이 이런 북한을 달래려고 하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이 있었지만 미국은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압박을 재개하곤 했다. 이런 미국의 압박과 무시를 참지 못한 북한은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다.

오바마 정부 또한 북한의 키리졸브 훈련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군사



3월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핵항공모함 이 훈련 이후 북한은 ‘오바마는 부시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훈련을 강행했다.

지난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이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무시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번 북핵 실험 또한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비난하고 제재를 추진하려 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따라서 강대국들의 북한 비난과 제재 시도는 위선이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최근 PSI 전면 참가를 선언했다. 그러자 북한은 곧장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구축

함·전투기 등을 전진배치하고 북한군의 공격 지점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을 해 왔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MD)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강경 대응과 군비 증강은 일본과 중국 등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더 큰 위험을 부를 것이다.

한편 <레프트21>이 예측했듯이 지난 번 로켓 발사 직후 이명박 정부는 범민련 등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탄압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진보적 활동가들을 ‘친북’ 혐의를 씌워 탄압하려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견해와 관계 없이 북핵을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 핵무기 애호가들의 위선적 북핵 비난

미국은 북핵을 비난하지만, 미국 이야말로 1만 기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실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핵무기 중독 국가’다.

오바마가 강화하려는 NPT(핵확산방지조약)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의 핵은 문제시하지 않는 ‘핵독점권 보장 조약’이다. 이런 위선적 정책 때문에 미국은 프랑스·중국 등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고, 북한의 사례에서 보듯이 핵보유 도미노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만 위선적인 게 아니다. 일본 우파들은 북한 ‘위협’이 불거질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자적 핵무장 명분 쌓기에 주력해 왔다. 일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천 기의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준비해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남한에서도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내 일부 우파 정치인들이 ‘핵주권’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참에 핵 재처리 권리는 확보하자는 것이 대다수 우파들의 야심이다.

이런 ‘핵무기 애호가’들이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고 호들갑떠는 것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다.

##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PSI 참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PSI를 창설하고 주도하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의 일등공신이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탄두와 운반 장치 설계를 제공했고,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또,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있고, 2005년에는 인도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더구나, 북한은 PSI를 근거로 해상에서 자국 배를 공격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이것이 비이성적 과잉반응인 양 때도

하지만, 대다수 국제법 학자들도 공해상에서 배의 이동을 가로막는 것을 불법으로, 사실상 전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PSI에 가입한 후 북한 선박을 무차별 검색하면 정말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PSI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화물연대·쌍용차 노동자 투쟁

##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마저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더욱더 눈길조차 줄 리 없다.

화물연대 박종태 조합원이 대한통운의 일방적 운송료 삭감과 대량해고에 몰려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돼 간다.

화물 노동자들은 트럭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데도 빚을 내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대한통운은 운송료 30원을 깎으려고 핸드폰 문자 하나로 해고 통지를 날렸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경찰 몽둥이와 군화발이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 추모 집회와 행진 이

후 해산하는 노동자들을 뒤에서 달려들어 ‘미친 개들’처럼 짓밟고 연행했다.

나아가 적반하장 격으로 이날 시위를 ‘죽장 시위’로 왜곡하고 노동자들을 구속·수배하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는’ 강력한 파업을 할까 봐 겁나서 탄압하는 것이다.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을 대량해고하겠다는 쌍용차에선 한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해고하겠다’는 사측의 협박에 시

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항의해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정부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연대를 보내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과 연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끝내야 한다.



#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5월 16일 7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은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앞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행진했다.

이날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커져이 쌓여 왔는지 보여 줬다.

지금 노동자·서민 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실질 실업자는 3백40만 명을 넘어 섰고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에 이르고, 수백만 명이 최저생계비조차 못받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어 금속 노동자 1인 마다 40~50만 원 가량 월급이 줄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복지 축소·전환배치·무급휴무·조업단축에 휩싸여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소문도 없이 해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불만이 저항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아 왔다. <사법연감(2008)>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자가 2007년에 비해 47.8퍼센트 증가했고, 검찰의 사법처리 숫자만 1천5백여 명에 이른다.

박종태 열사가 유서에서 말했듯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한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며 5월 16일 대전에 모여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일 시위대가 “죽창”으로 경찰을 “찌르고 쏘시고 내리”켰다며 “집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애초 대한통운 앞까지 평화 행진을 불허하고 물대포를 쓰고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도발한 것은 경찰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만장의 깃대를 이용해 경찰의 폭력에서 시위 대열을 지키고 정당한 행진을 사수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만장 깃대를 “죽창”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악랄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의 고통전가 정



5월 16일, 진짜 폭력은 경찰이 행사했다.

사진 이미지

책과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 경찰 탄압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그리고 5월 16일에도 진정으로 폭력적이었던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참가자 5백여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방패에 머리가 찢기고 고막이 손상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5월 16일 시위를 ‘폭력 시위’라고 낙인찍으며 온갖 반민주적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은 이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도심의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

로” 금지하려 한다.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이 정부는 자유민주 정부를 자처할 자격도 없다. 경찰청장 강희락은 아예 최루탄까지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전교조, 다함께 등을 반정부 불법 좌파 단체로 지목하고 이들 단체 활동가와 네티즌 2천5백여 명을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해 검거 ‘소탕’할 계획도 논의된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6월 MB악법 저지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반민주적 탄압

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탄압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저항을 위축시키고 싶어하지만, 정부의 광분한 탄압은 오히려 정부가 얼마나 저항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줄 뿐이다.

그럼에도 막무가내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항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럴 때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민중운동 단체들은 탄압에 공동으로 맞서는 행동을 건설함으로써, 탄압에 위축된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결집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집중 탄압을 받고 있는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지지·연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이 시작되다

5월 18일 다함께가 제안해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용산범대위 등이 함께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발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진보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했고, MBC, KBS, <한겨레>도 취재하러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을 규탄하고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상황을 “민주주의와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정권의 도발”로 규정하고 폭넓은 연대 투쟁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습시위꾼’ 무더기 소환장 발부,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 국가보안법 탄압,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수배 등에 대해 정점별·사안별 대응만이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수호, 공인탄압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네트워크는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지속적인 항의 행동을 건설하기로 했다. 탄압에 맞서 개별 대응이 아니라 주요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네트워크는 첫 번째 행동으로 5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발미로 한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등 반민주적 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네트워크는 5월 말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연호하면서 6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이 통과시키려는 MB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최영준



종합

세상을 읽는 17경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 세계가 스위스 제약회사 ‘로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

— 언제나 돈 벌 기회만 노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뉴민주당 선언’에 대한 <중앙일보>의 칭찬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비리 검사들을 먼저 수사했다 가는 자칫 인사(人事)를 새로 해야 할 정도로 많은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내부 수사를 뒤로 미뤘다”

— <조선일보>의 한탄

“20대 백수가 급증하면서 비정규직·인턴·알바의 불만을 조직화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80년대 말 노동 운동의 초기 증상을 보는 기분”

— <조선일보> 송희영의 격정

“상도동에 갔더니 YS가 나에게… 콧속말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겠다. 김대중이 빨갱이다’고 하더라”

— 박지원

“제가 계임을 못하게 말리자 애가 ‘이런 엄마랑 못 살겠다’고 하면서 뛰어 내리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 전여옥

정말 그게 진정한 이유였을까?

“[1980년] 광주는 화염병이 난무하고 공수부대를 공격하는 등 폭력의 백화점이었다… 폭력이 민주화운동이 됐기 때문에 작년 광화문에서 촛불이, 올해 용산에서 철거민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

— 지만원인가 지십원인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로 살기엔 너무나 팍팍한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기사, 화물·덤프 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비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식 법률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이 특수 형태라 노동자는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입차주’로 불린다. 한마디로 사장이란 애긴데, 빛 좋은 개살구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질 못하는 탓에 이들은 실제로 종속 관계에서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데도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 근로

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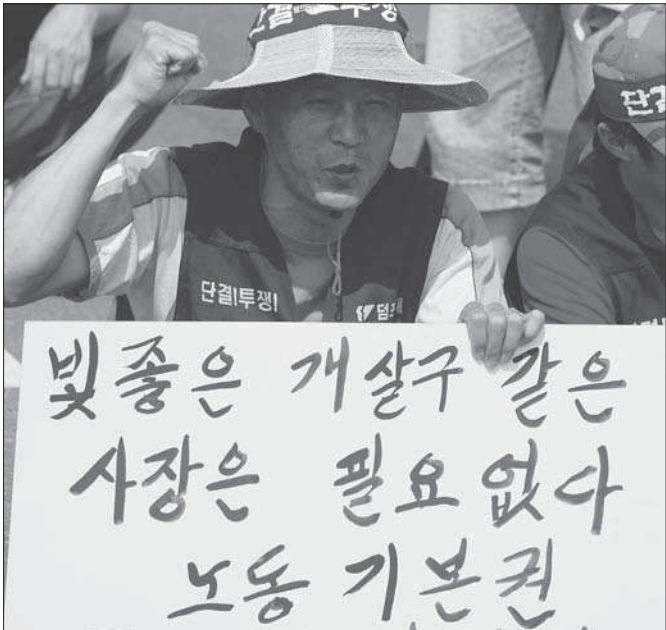
그래서 화주가 시키는 대로 과속으로 과적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눈비가 오는 날에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 늦게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학습지 교사, 레미콘,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은 힘을 합쳐 힘겹게 싸우며 조직을 만들고 권리를 지켜 왔다.

빛 좋은 개살구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와 사장들은 이 모든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 한다. 지난 10년 동안 온갖 탄압을 뚫고 고난과 투쟁 끝에 건설한 소중한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끝까지 막아온 것이 이런 이명박의 공격을



누가 이들을 ‘사장’이라고 우기는가

사진 성경현

가능하게 해 왔다.

현재 민주당 당론인 김상희 법안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인정하는 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민주

당과 손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함께 마련한 개정안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국회 로비만이 아니라 운동 건설에도 열의를 가져야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난해 촛불항쟁을 계승하고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건설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출범했다. 그러나 결성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회의는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MB악법 저지 과정에서 국민회의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과 공조에 집중하며 항의 운동 건설에 소홀했다. 결국 국민회의와 별도로 ‘MB악법 저지 비상 국민행동’이 만들어져 항의 운동을 조직했다.

용산참사 항의운동 때도 국민회의는 정책 제시 구실만 하겠다고 중요한 ‘민생’과 ‘민주주의’

문제였던 운동 조직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용산 쟁점을 이용해 국회 내 세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었고, 국민회의는 2월 내내 그런 민주당과 공조하는 데 치중했다.

국민회의 내 주요단체인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는 민주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넣어 견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견인되기보다 뒤통수만 쳐 왔다.

최근 ‘뉴민주당 플랜’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과 엇비슷한 정책을 유지해 온 민주당은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증폭돼 온 수개월 동안 별다른 반사이익도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상시적 공조는 국민회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배신한 이후 국민회의는 최근까지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MB악법 통과 실패, 신영철 파문, 4.29 재보선 참패 등 연이은 타격을 받은 이명박이 반민주적 탄압에 매달린 이 기간이야말로 국민회의가 활발히 활동해야 할 때였다.

5월 2일 촛불1주년 집회도 그 일환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방해한다’는 핑계로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

소속단체인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고 있는데도 규

탄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경찰이 모든 도심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상습 시위꾼’을 수사한답시고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데도, 국민회의는 항의행동을 건설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함께”를 대표해 국민회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이런 국민회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해 왔다.

결국 국민회의의 책임 방기 때문에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국민회의의 밖에서 결성됐다. 그나마 국민회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

은 다행이다. 또, 참여연대가 초반에 집회와 대중행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결성이 늦어지긴 했지만, 6월에 국민회의가 반민생·반민주 악법 저지 운동을 건설하자는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 비주류인 이강래가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민주당 내 개혁파인 ‘민주연대’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회의는 또다시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국민회의는 더는 무기력한 사이비 ‘개혁’ 정당 쳐다보기를 그만두고,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데 매진할 때다.

최영준

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4·29 재보선 참패, 메이데이·촛불 1년 투쟁,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은 6월 MB악법 통과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자 쥐구멍에 물린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에 나섰다.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레프트21>이 예견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은 진보진영 내 일부 단체가 북한을 지지한다는 점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마녀사냥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옛 한국청년단체연합 등이 마녀사냥의 핵심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 지난해 촛불 보복의 일환으로 탄압받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도 또다시 탄압 대상에 올

랐다. 범민련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간부도 압수 수색을 당해 민주노동당이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월 16일에는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누리꾼을 구속했고, 5월 20일에는 한총련 대의원이었던 조선대 학생을 체포했다.

이명박은 범민련이 남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난 것(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과 범민련 기관지 <민족의 진로>의 ‘이적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회합·통신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잣대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임 대통령이 모두 북한의 “수괴”를 “고무·찬양”하고 “회합·통신”했다. 남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도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일상적으로 ‘교류’도 해 왔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이명박도 개성공단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진보 인사들은 북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가.

이중잣대

범민련이 북한체제와 통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견해를 표명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북한 로켓 발사 경축’ 발언으로

졸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된 가수 신혜철 씨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범민련 활동가들의 ‘친북’ 행위를 빌미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범민련 탄압

이 일련의 반민주적 탄압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한 많은 진보 단체들이 경전의 차이를 넘어 범민련을 방어하려 나섰다.

압수수색 당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신속하게 기자회견이 열렸고, 5월 12일에는 80여 단체가 모인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범민련방어대책위)가 발족했다. 여기에는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좌파들도 포함돼 있다. 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범민련방어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았다. 진보신당 지도부가 민주노동당 분당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당원들을 일관되게 방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보면 환영할 만한 진일보라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 단체이기도 하다) 같은 대표적인 진보적 시민단

체와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이 민주주의 문제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는 단체도 범민련 방어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방어 운동의 폭을 넓히려면 범민련 고유의 주장을 범민련방어대책위 내의 다른 단체들에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범민련방어대책위 상황실이 발족식 기자회견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실로 환영할 만한 대전환”, ‘민족의 자주자립이 세계평화와 번영의 열쇠’ 등 범민련 고유의 정세분석 — 대책위 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 을 마치 대책위 전체의 주장인 양 쓴 것은 문제였다.

범민련방어대책위 결성의 의의를 잘 살려, 사상의 차이를 넘어 국가보안법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한다.

최미진



#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까 봐 두려워 온갖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집단적 행동으로 생산과 물류를 멈춰서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막강한 잠재력이 분출될까봐 겁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김달식 투쟁본부장과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5월 16일 연행자 중 20명을 구속했다. 20일 새벽 경찰은 화물연대 본부와 대전, 광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게 출석 요구서도 발부했다.

이명박은 직접 나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고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이명박 자신이야말로 반동적 친재벌·반서민 정책과 반민주적 폭력 탄압을 일삼는 ‘후진성’의 상징인데 말이다. 더구나 고통전가에 맞선 강력한 투쟁 장면이 보도되는 것은 전 세계의 노동자·민중들에게 자신감을 줄 뿐이다.

정부는 탄압뿐 아니라 개악도 멈출 생

각이 없어 보인다. 노동부 장관 이영희는 “반드시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쌍용차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고통전가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대한통운조차 박종태 열사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라며 버티고 있다.

저들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투쟁을 ‘원천봉쇄’하려 한다면 노동자들도 더 물러설 대가 없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어차피 징역살이 해 편안히 주는 밥 먹고 사는 게 더 낫다”는 것이 현장에 깔린 전반 기류”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하며 그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따라서 박종태 열사를 죽인 것도 모자라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계속하는 자들에 맞서는 반격이 필요하다. 파업을 막으려는 탄압이 시작된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하며 그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화물연대 김달식 투쟁본부장이 “건설노동자, 철도노동자, 화물노동자가 하나가 되자”고 호소한대로, 건설·철도노조의 27일 상경·파업 투쟁이 성공하고 투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박종태 열사의 부인 하수진 씨는 “그놈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부와 기업주들을 비난한 바 있다. 저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아내려면 오로지 강력한 투쟁과 연대만이 필요하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이 말했듯이 “지난해에는 촛불소년들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면 이제는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항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박종태 열사를 죽인 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을 짓밟으려 한다.

사진 이미지

## 민주노총 지도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반격에 나서야

정부의 탄압이 비처럼 쏟아지는 지금 민주노총 임성규 지도부의 단호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5월 19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뜬금없이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며 6월 9일까지 “대화기조를 유지하며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김빠는 말과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이 노동자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밀어붙이고 있고, 출석요구서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기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신없이 우리를 두들겨 패는 강패에게 ‘대화 기조를 유지’ 하자는 건가?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이 제안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쌍용차 대량해고 중단’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믿

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교섭 성사를 위한 인내”를 해야 하는가?

앞으로 거의 20일 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며 투쟁을 늦추는 것은 저들에게 탄압과 이간질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을 꺾을 수 있는 시간만 벌여 주는 것이다.

가망없는 교섭에 연연하며 투쟁을 미루는 것이 임성규 위원장이 말한 ‘사회연대노총’과 ‘사회연대전략’이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단결과 투쟁이 아니라 양보와 협상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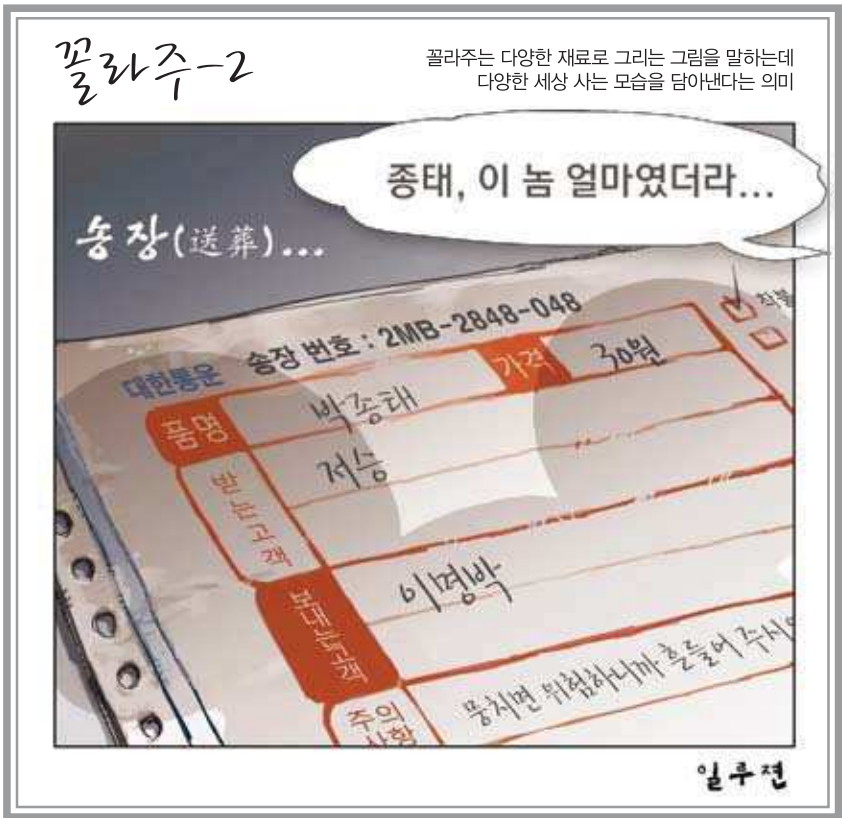
가장 밀바라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다 투쟁에 나서고 탄압받을 때 강력하게 연대 투쟁하는 게 진정한 ‘사회연대’다.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

는 정부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는 게 진정한 ‘사회연대’다.

임성규 지도부는 당장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강력한 반격을 조직해야 한다. 긴급히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조직해 탄압받는 부문을 엄호하고 그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고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쌍용차 등이 파업에 돌입하면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 연맹과 주요 노조들이 각개약진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힘을 집중시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야 한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총력 파업을 통해 정부와 기업주들의 숨통을 조인다는 과제를 망기하지 말아야 한다.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노동자에게 있는 양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IMD 자료는 각국 기업주들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애초부터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세계은행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최하위로 보고한 것은 주로 퇴직금 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 제도가 부실한 한

국에서 퇴직금은 미뤄진 임금일 뿐이다.

한국은 임금을 정규직의 60퍼센트밖에 못받는 비정규직이 8백50만 명에 달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 국제노동기구 조사를 보면,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세계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압도적인 세계 1위다. 기업주들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널린 것이다.

평균 근속기간을 보더라도 영국이 8.2년, 독일이 10.5년, 스웨덴이 11.5년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4.6년에 불과해 고용이 매우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나 보수 언론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노동유연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1993~2008년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보면 노동유연성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한국은 88.1퍼센트로 3위, 슬로베니아도 88퍼센트로 4위, 대만이 5위였다. 일본의 노동유연성은 상위권이지만 성장률은 최하위권이고, 핀란드는 노동유연성은 하위권이지만 성장률은 높았다.

무엇보다 노동유연성 1위인 미국의 성장률은 32.2퍼센트에 불과했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 최악의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설사 노동유연성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경쟁력이 국민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늘고 4~5퍼센트대의 성장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하위층은 지난 10년간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부자들의 지갑만 두둑해졌다. 부유층·대기업은 대규모 잉여금을 쌓아 두면서도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됐던 것이다.

게다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기업의 수익이 나빠지고 있는 마당에, 노동유연성을 더 늘린다고 해서 8백조 원에 달한다는 유동자금이 고용을 늘리는 투자로 들어가 경제 위기를 끝내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도 쉽게 해 고용과 임금으로 가는 몫을 줄이고 이윤몫을 늘리려는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 줄어드는 재벌·기업주의 돈 주머니를 어떻게든 채워 주려는 것이다.

부유층·기업주가 만든 경제 위기에서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길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것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하고,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에서는 정부에게 일자리·임금 보호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또 부유층 세금을 대폭 늘려 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방법은 이윤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서민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 기성 정치

한나라당

# 환멸만 남고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이박투구’

〈조선일보〉 김대중은 최근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이대로 가면 두 사람 다 망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은 이 길로 가고 있다.

먼저 이명박 쪽은 황당하게도 4·29 재보선이 보여 준 민심을 ‘박근혜를 꺾어야’로 멋대로 해석했다. 그래서 친박 김무성을 원내대표로 세우려다 실패하자, 이제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온 친박 최경환을 ‘평 대신 닭’으로 보고 있다. ‘상왕’ 이상득도 최경환을 지지하는 분위기이고 박근혜도 묵인했으며 친박과 이상득계가 힘을 합쳐 이재오계와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경환이 정책위의장으로 뽑혀도 친이·친박의 화합은 어려울 것이고 민심도 돌아설 리 없다는 것이다. 민심은 친이와 친박의 ‘이박투구’에 염증을 느낄 뿐이다.

“MB정책이 부자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여론이 67퍼센트이고, 이런 정책을 주물러 온 이상득은 “자제”(85퍼센트)하거나 “의원직 사퇴하라”(40퍼센트)는 여론도 높다.

그래서 원희룡이 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쇄신특위조차 ‘만사형통’ 문제를 살짝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마 정치 철새들이 이명박과 거리두며 친박으로 옮겨가는 ‘월박’의 반영일 것이다. 더구나 박희태는 이미 “쇄신평위가 [뭔가]를 결정한다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전환은 고사하고 이상득의 ‘만사형통’도 쉽게 안 바뀔 것이다.

한편 다음 대권을 노리는 박근혜는 계속 이명박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사실 현재 이명박의 정책은 박근혜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내건 ‘줄푸세’ 공약과 다를 게 없고, 그래서 “친박이 [이런 정책 추진의] 발목은 잡은 적은 없”(박근혜)다.

박근혜는 대체로 침묵 속에 이명박과

“MB정책이 부자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67퍼센트이고, 이상득은 “자제”(85퍼센트)하거나 “의원직 사퇴하라”(40퍼센트)는 여론도 높다.



‘쥐와 고양이’처럼 사이가 나쁜 두 사람

반대 세력의 대치를 지켜보다가 대세가 기우는 쪽으로 ‘순가락을 얹어’ 왔다. MB약법 강행을 돕다가도 반대 여론과 저항이 크면 이에 부정적인 척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친제벌 천국을 만드는 데 돌진하는 같은 한나라당 의원”이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박근혜를 비판했다. 이런 박근

혜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어부지리가 언제나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지금 박근혜의 처지는 절뚝거리는 이명박 정권의 주위를 맴돌며 주위 먹을 것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와 비슷하다. 그 점에서 최근 박근혜가 “4년 중임제, 대선 총선 [주기] 일치가 바람직하다”고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개헌하려면 이명박의 임기를 8개월이나 단축해야 하고, 또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도 이명박 정권의 수명이 길지 못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 햇불 민주주의

실제로 온갖 반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더욱 멀어질 뿐 아니라 언제 다시 더 큰 제2의 촛불이 벌어져 정권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예컨대 서울대 교수 하영선은 “‘촛불 민주주의’가 쉽게 불붙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햇불 민주주의’로 타오를 위험이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조언했다.

이명박 정권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그것이 낳을 저항을 막으려면 반민주적 탄압에 의존하는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없다. 소수 재벌과 부자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들의 이윤을 위한 체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게 이 정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득 측근 장제원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말은 정부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이 정권은 소설가 황석영의 궤변처럼 “중도 실용”이 아니라 소설가 북거일의 지적처럼 “분명히 우익 정권”이다.

고환율과 일시적 추가 상승이 낳은 착시 현상 뒤에서 점점 심해지는 한국 경제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 기반인 재벌과 부자들이 더 조바심을 내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고통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더 매달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반이명박 여론은 더 커질 것이고 정치 위기와 선거 패배는 거듭될 것이다. 친이와 친박의 분열도 더 심해질 것이고, 더불어 친이 내부에서 이상득계와 이재오계의 갈등도 더 커질 것이다.

더구나 ‘천박한’(천신일·박연차·한상률) 게이트의 발전 양상도 심상치 않다. 천신일은 최근 “내가 잘못되면 친구인 대통령도 모양이 좋은 건 아니다” 하

온갖 반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더욱 멀어질 뿐 아니라 언제 다시 더 큰 제2의 촛불이 벌어져 정권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 말했는데 이미 이명박의 ‘모양’은 많이 구겨졌다. 폭락할 것이 뻔한 천신일의 세종나모 주식 1백71억 원어치를 기관투자자들이 대량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선 이후 국제청과 검찰이 박연차에게 배운 특혜가 천신일·이명박·이상득과 무관한 일이었는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확대할 이 ‘국정 최대 과제’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국정 기조를 바꾸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정권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지윤 기자 ralm71@hanmail.net

민주당

## 왼쪽 압박이도 끄고 우향우하려는 뉴민주당 플랜

친제벌·부자 정책 때문에 한나라당이 증오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되레 “부자를 적대시하지 않고 강남과 대기업을 포용하는 전략”(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회 위원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이다.

김효석은 뉴민주당 플랜이 “좌나 우, 어느 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좌우 양쪽으로 간 것”이라며 물타기하고 있다.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사는 공동체” 등의 추상적 문구로 뒤덮인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보면 아리송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인적으로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김효석의 말을 들으면 우향우라는 성격이 분명해진다. 김효석은 “경쟁을 통한 효율화, 개방화는 기존보다 오른쪽으로 갔다”고 인정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좌측 압박이를 쳐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더니, 이제[는] … 압박이를 모두 끄고 우회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뉴민주당 플랜을 비판했다.

김효석은 “과거의 좌파와 우파는 낡은

개념이 되었다”면서 미국 클린턴 정부의 “‘현대화’의 길”을 예로 들며 ‘제3의 길’ 노선을 분명히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제3의 길’ 노선이 “신우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결별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답습”(《‘제3의 길’은 없다》, 인간사랑)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99년 방한 강연(‘제3의 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때도 “제3의 길은 사기”이며 “신자유주의에다 … 진실을 은폐하려고 그럴싸한 글귀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노무현도 “좌파 신자유주의”, “진보적 시장주의” 운운하며 비슷한 사기를 친 바 있다. 이처럼 번지르르한 말 뒤에서 우파와 타협하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경멸의 대상이 됐고 민주당은 대중의 지지를 잃고 권력도 잃었던 것이다. 지난 연말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죽도 밥도 아닌 ‘중도 개혁’은 고작 18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반면, ‘진보’가 76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의 당권파와 김효석은 “그동안 우리가 … 부자나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당으로 돼 있”었다며

더한층 우향우를 추진할까?

이것은 민주당의 계급 기반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업주·부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근본에서 차이가 없다. 두 당은 기업주·부자에게서 자금을 지원받고 인력을 충원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중앙선관위의 ‘2008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모금액은 4백억 원이고 민주당은 1백74억 원이었다. 의원 평균 재산은 한나라당이 30억 5천여만 원이었고, 민주당은 19억 9천여만 원이었다. 노무현의 후견인 박연차가 천신일의 오랜 친구였고, 이명박의 친구 천신일은 이견희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잘 보여 준다.

민주당이 지난 2월 국회 막바지에 한나라당의 부자 맞춤형 추경예산안 본회의 처리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처리에 합의해 준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환노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빅딜설이 흘러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일 것이다.

이런 계급 기반과 거기서 오는 압력 때문에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답

“좌측 압박이를 쳐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더니, 이제[는] … 압박이를 모두 끄고 우회전하겠다는 것



김효석과 정세균

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뉴민주당 플랜의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다”며 환영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강래 등은 뉴민주

당 플랜이 민주당의 지지를 정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2004년 탄핵 때 한나라당과 손잡았던 추미애 등의 진정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이들이 진보개혁성 강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동영 복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따라서 그동안 해 온 우회전을 반대하는 것인지, 단지 왼쪽 압박이를 끄는 것만 반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민주당과 일시적·전술적 제휴는 가능하지만 전략적 동맹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 2월 국회 때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며 한탄했는데, 항상 민주당의 배신을 경계해야 한다.

반이명박과 비민주당 정서 속에 어떠한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가 늘어나는 한편, 진보 정당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지금, 진보진영은 민주당과 구별되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대중투쟁을 건설하며 이명박에 맞서야 한다.

전지윤 기자 ralm71@hanmail.net



## 종합

#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5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협약 무효 통보로 개성공단 경험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이 북한에 있는 양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북한 당국에 개성공단 문제를 북핵 등 다른 사안들의 부차적 조건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촉구”했는데, 이렇게 먼저 활용한 쪽은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은 취임 첫날부터 “북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 협력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엄포를 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입안한 비핵개방3000 구상 또한 이런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다.

게다가 합참의장 내정자의 북의 핵 기지 선제 타격 발언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 투표, 이명박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돼야 한다”는 발언 등은 북한의 연이은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올해 들어서도 이명박 정부는 2년 연속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고 MD와 PSI 참가를 저울질 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겨 왔다.

최근 현대 아산 직원 억류 사건과 북한의 개성공단 협약 재검토 통보 이후 이명박 정부는 PSI 참가를 잠시 유보하고 있지만, “유씨가 석방되는 즉시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겠다는 방침”(김연철 한겨레평화연 구소장)이다보니 북한이 협약 무효 통보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북한의 협약 무효 통보 이후, 남북 화해를 바라는 여론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압력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조래한 근본 원인인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채, 임기응변식으로 대화만 제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적대 관계의 완



남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남북 경협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과 남한 정부의 공조에 반대하는 투쟁 없이, 경협 강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근본에서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 평화보다 이윤 추구

이번 개성공단 협약 무효 통보에 대해 다수의 언론들은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게 “원-원”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과연 개성공단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에게 “원-원”이었나?

지난해 말 통일부가 발간한 ‘개성공단 Q&A’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약 55달러 정도로 남한의 최저임금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으로 유명한 중국에 비해서도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각종 세금 혜택도 누리고 있다. 기업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 영업세율 모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남한에 비해서도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국내 어느 업체도 쫓아올 수 없고 중국도 꺾을 수 있었다.”(개성공단 입주 기업주)

또한 남한 정부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의 성과로 해상 수송로보다 더 효율적인 육상 수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애초부터 남한 정부와 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평화보다는 이윤 추구의 “블루 오션”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회담 결과 채택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은 대체로 평화보다 번영, 즉 기업 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이익을 철두철미 옹호하는 이회창·정몽준 등 우파 정치인들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본심이기보다는 냉전적 선동을 통해 우파들 내에서 입지

민족 구성원인 북한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를 강화하려는 데마고기(감정적 거짓 선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의 탐욕스런 이윤 추구는 민족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을 통해 이러한 명분의 위선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자, 대다수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이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을 억압·착취해 온 장본인이자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초착취에 공모해 온 북한 당국의 이번 요구가 남한 당국에 대한 압박 수단일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민족 구성원인 북한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이 점을 도외시하곤 한다.

가령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을 살려내는 것이 절박하다”고 했는데,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면, 같은 민족 구성원인 북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할 수 없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진보신당의 입장 또한 계급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에서 민족의 이익으로 표상되는 북한 관료와 남한 기업주들의 이익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남북한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 단결을 옹호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도 남한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관점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남한의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남한 노동자들과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도 모두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쫓불 재판 외압 파문

“5차 사법파동”이 거론될 정도로 대법원의 신영철 재판 외압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사법부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자기가 만든 돌부리에 걸려 또 낭패를 겪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서조차 이런 분열이 생겨난 것은 경제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압력 속에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파동은 쫓불항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둘러싸고 시작됐던 것이다.

이 파동 속에 사법부의 추악하고 불공정한 본질도 드러나고 있다. 대법관 박시환은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사법부와 집권 세력의 오랜 유착 관계를 폭로했다. 그는 다른 11명의 대법관들이 사법적 기준이 아니라 “동료 문제라서” 신영철을 감싸고 돌았다고 폭로했다.

신영철이 친박연대 국회의원 3명의 재

판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 김용담이 친박연대에게 신영철 관련 논평 자체를 요구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서청원은 “사법부에 속았다”고 땅을 쳤다. 그동안 이런 은밀한 거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만하다.

이처럼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법 질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증폭되자 우익들은 노심조사하면서 사태 봉합을 주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이 나서” 판사들을 억누르라고 다그쳤다.

<조선일보>는 “젊은 판사들에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권·자본과 유착하면서 노동자·민중으로부터는 ‘독립’ 하라는 말이다.

고등법원 판사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데도 이런 우파들의 지원에 힘입어 신영철은 “낙인을 일생 짊어지고”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개혁적 판사들의 반발에 압력 받아 반기를 들었던 박시환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지금 우익들은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 항의하며 시위를 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저들만의 ‘법 질서’에 균열이 생길까 봐 노심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질서’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냉소는 계속 커져 왔고 이번 파동을 거치며 더 커질 것이다. 3보1배를 하며 신영철 사퇴를 요구한 법원노조 양운석 서울중앙지부장은 “신영철을 임명한 사람도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요구에 대한 지지와 행동은 더 커져야 한다. 신영철이 사퇴한다면 저들의 분열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우리 편의 자신감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호중 기자 | rednuo@left21.com



이용훈이 섬기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MB

사진 최윤진



##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 정부는 재파병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가 재파병 없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재파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이미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고 또 여전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급한 처지에 몰린 미군을 실질적으로 도울 군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자이툼 부대가 철수할 때 병력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주기를 바랐다. 또한, 지역재건팀(PRT)도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경호 능력을 갖춰 한 주(州)를 담당해 줬으면 했다.

정부는 재파병 계획이 없다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달린 문제라고 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PRT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PRT 규모를 3백 명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일단 PRT 규모를 대폭 늘리고, 나중에 이들의 경호를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정부에 조중동은 자이툼 부대 파병 때처럼 홍역을 치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에는 동맹국의 요청 때문이라는 “동맹지상주의”로 대처하지 말고 “파병에 따른 국익”이 무엇인지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선택해야 한다”며 펍이나 ‘새로운’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대차대조표의 핵심은 “우리 대신 주한미군의 일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될 경우 그로 인한 우리 안보상황의 악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파병 명분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이후 한국은 테러 위협 국가가 됐고,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북한을 ‘악마화’ 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탈레반을 소탕하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적 책무”라는 주장도 전혀 새로운 게 없다.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저항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이제는 제국주의 지배의 하위 협력자가 돼 약소국을 침략하는 만행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적 책무”인가?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자이툼 부대 소속 장교들이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이라크 ‘재건’ 사업이 대부분 허점투성이에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권력의 밑바닥부터 대통령까지 전부 부패한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확대해 나갈지, 재파병은 또 어떻게 정당화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추악한 점령 지원일 뿐이고, 우리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

김덕엽



5월 19일 아프가니스탄 학살 중단·점령 종식, 한국군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 임수현

## 탈레반 — 제국주의의 피조물에서 저항의 구심으로

오바마는 취임 초 “알카에다와 탈레반 테러조직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중파 결정을 내렸고, 최근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와 파키스탄 대통령 자르다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탈레반 소탕에 대한 전의를 다졌다.

탈레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보수적 이슬람 교리인 와하비즘에 바탕을 둔 단체다. 이전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지독하게 우익적이고 여성차별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 이유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정당화했고, 아프가니스탄 바깥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하지 않거나 심지어 지지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샘물교회 교인들이 탈레반에게 피랍됐을 때, 참여연대 등 평화주의 단체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 한국의 파병 정책과 같은 비중으로 탈레반을 비판했다.

그러나 애당초 미국과 파키스탄은 탈레반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르다리가 지적하듯이 탈레반은 “우리[파키스탄]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 존재”였다.

탈레반을 이해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 그들이 집권하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1979년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8년 동안 점령을 지속했다. 이 기간 동안 50만 명이 살해됐고 1백만 명이 불구가 됐으며 8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총인구는 약 1천5백만 명이었다.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옛 소련과 경쟁하던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슬람주의자들, 즉 무자헤딘이 투쟁을 이끌었다. 1988년, 옛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서 철수했다.

중앙권력에 갑작스레 공백이 생기자 이번엔 이슬람주의자들이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이 내전은 무려 7년간 지속됐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정치적 혼란 상태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갈취하려면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안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필요에 따라 탈레반은 미국과 파키스탄 정보 당국의 후원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학생들(탈레반)’로 구성됐는데,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는 파슈툰족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또 이들은 성장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아래 설립된 종교학교(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의 이런 출신 배경이 탈레반 사상의 두 가지 주요한 특징, 즉 이슬람주의와 파슈툰족 우월주의를 만들어 냈다.

1994년 탈레반이 처음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었을 때, 그들은 겨우 30명짜

리 게릴라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 2년 만에 수만 명으로 불어나 파슈툰족이 대다수인 아프가니스탄 동부와 남부, 수도 카불을 점수했다.

부패한 이전 권력자들과 다르게 탈레반이 법과 질서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대중은 그들을 신뢰했다. 또 탈레반이 미국과 파키스탄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파슈툰족 우월주의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두는 데 걸림돌이 됐다. 탈레반의 통제 범위는 아프가니스탄 동부와 남부를 벗어나지 못했고 나머지 지역은 군벌들이 통치했다. 이것을 지켜본 미국은 탈레반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이루고자 한 기대를 접었고, 1990년대 후반 그들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그 뒤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곧바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 오랜 기간 침략과 내전에 이력이 난 아프가니스탄 민중은 당장 저항에 나서지 않았다. 또 탈레반은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본뜬 초보수적 이슬람 통치와 축구장에서의 즉결 처형 등 기행으로 대중의 지지를 많이 잃은 상태였다.

파키스탄 정보당국이 나서 미국과 탈레반 사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데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 이 협정으로 탈레반은 카불을 떠나 파키스탄 점령 북서변경주 등 파슈툰 부족 지역으로 돌아갔고 미국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령군의 아만적 행태는 곳곳에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 냈고 ‘재건’을 한다며 들어온 NGO들은 부패했다. 결국 사람들은 다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탈레반이다.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탈레반을 썩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점령에 협력하지 않고 공공연히 저항을 호소하는 세력으로 잘 조직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경험에서 배운 탈레반도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여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이다. 그러나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는 전술을 지양했고 — 이것은 주로 알카에다가 즐겨 쓰는 수법이다 — 파슈툰족 우월주의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점령군에 맞서 모든 무슬림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탈레반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 국토의 80퍼센트를 장악해 명실공히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이 됐다.

한편, 탈레반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탈레반이 파키스탄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데 조바심을 느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무인폭격기를 이용한 무자비한 폭격으로 대응했다. 또 파키스탄 정부에 압력을 넣어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게 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됐고 무려 2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탈레반에 수동적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 중 일부는 탈레반과 함께 무장 저항에 나섰다.

지난 8년의 경험이 보여 준 것은 점령이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을 개선하긴 커녕 더 끔찍한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모든 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종합

# 공정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무에 올라 하루 종일 카카오를 따는 일을 6살부터 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정작 너무 가난해 초콜릿을 먹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만성적인 빈곤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자유무역,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이런 끔찍한 결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자유무역은 생산자들에게 절대 불리한 유통 구조를 강요한다. 현지에서 70달러에 거래되는 50킬로그램짜리 커피 한 자루가 영국 런던에서는 1백80급절인 1만 3천 달러에 거래된다. 팥벌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가난한 농민들은 전체 몫에서 고작 0.5퍼센트 남짓 가져가고 나머지 전부를 다국적 기업들과 중간 상인들이 갈취해 폭리를 취한다.

공정무역은 시장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생산 농민들에게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보통 소매가격의 2퍼센트 정도를 ‘사회적 프리미엄’으로 제공한다. 이 ‘프리미엄’은 병원·학교 건립, 상수도·화장실·전기시설 구축 등 지역사회 개발에 쓰인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균형을 바로잡는 구실’을 하는 공정무역은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실천방식’이고 ‘주류 무역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모티브북이라는 것이다.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커피, 초콜릿, 바나나, 녹차, 축구공, 면직물 등 2천여 품목에 달한다. 제품 수는 21세기 들어 첫 5년 동안 15급절이 넘게 증가했고, 교역량도 매년 20퍼센트씩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공정무역 커피의 매출이 연 2백~3백 퍼센트씩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는 공감할 측면이 많다. 이는 가격이 싸지만 생산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또, 부를 재분배해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열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착한’ 마음과 상관없이 공정무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무역으로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없다.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커피협정이 다국적기업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에 의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내 공정무역 제품 매장 —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은 시장이 허용해 주는 한도 내에서만 ‘공정’하다. 사진 이미지

1989년 깨졌다. 이 기구들은 커피 등을 재배해 현금을 마련해서 부채를 상환하라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다그쳤고, 이런 요구들에 응할 때만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결과 커피가 과잉 생산돼 국제 커피 가격이 하락했다.

1977년 커피 가격은 파운드당 2백18센트였지만, 2002년에는 43센트로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2천5백만 명에 이르는 세계 커피 농민 중 3분의 2가 절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코코아도 비슷하다. 1977년 파운드당 4백89센트이던 가격이 2000년대 초 51센트로 급락했다. 제3세계 농민들의 빈곤과 굶주림을 담보로 네슬레, 크래프트,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이다.

공정무역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비싼 파운드당 1백26센트를 농민에게 준다. 그러나 이 가격으로 농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이는 30년 전 가격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실제로 공정무역의 혜택을 보는 농민들도 충분치 못한 소득 때문에 도시에서 임시직으로 소득을 보충한다.

공정무역 가격은 일반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비쌀 수는 없다. 공정무역은 일부 ‘착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만큼 비싸지만, 아직 그만큼 ‘착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끌어들이 수 있을 만큼 비싸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은 진정 ‘공정’하기보다는 시장이 허용해 주는 한도 내에서 ‘공정’한 것이다.

## 편승

최근 다국적 기업들도 공정무역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에 편승하고 있다. 자신들이 제3세계 농민들을 수탈한다는 이미지를 지우려고 공정무역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네슬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회사로 8천5백여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공정무역에 대한 호들갑스런 홍보의 이면을 보면 공정무역 제품이 고작 한 품목이다. 다국적기업 크래프트도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지만 최소 가격인 파운드당 1백26센트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기업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뿐이다. 이윤을 위해 그동안 농민들을 수탈해 가난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 농민들의 가난을 이용해 또 다시 배를 불리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공정무역 상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지는 문제도 있다.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의 사람들 중 77.9퍼센트가 “가격이 적당하면 구매한다”고 답한 반면, 월 1백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39.7퍼센트는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아름다운가게). 실제로 월 소득 3백만 원 이상의 사람들이 전체 공정무역 상품의 81퍼센트를 구입한다(한겨레경제연구소). 이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무역 상품의 주소비자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산층 이상은 ‘착하고’ 저소득층은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정무역 상품 구매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증가함

에도 공정무역 커피의 교역 비율은 0.1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더구나 네슬레와 크래프트라는 두 다국적기업이 전체 커피의 78퍼센트를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윤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제3세계 농민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

이처럼 공정무역은 그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공정’하지 않은 자본주의 체제에 큰 파열을 내기 힘들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시장을 이용해서 제3세계 빈곤을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애덤 스미스연구소의 알곤톤 표현처럼 “공정 무역 운동이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상징적인 승리일 뿐이다.”

체제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자선단체 옥스팜처럼 ‘잉여’ 커피를 불태워 없애 커피 가격을 올리자는 주장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한참 빗나간 것이다. 매일 10만 명이 굶주림 때문에 죽지만 곡물 가격을 유지하려고 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버리는 미친 짓거리와 비슷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생산과 분배의 전 세계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선한 개개인들의 ‘착한’ 소비로는 부족하다. 집단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실천방식’이다. 무엇보다도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다국적기업들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폭리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리는 ‘부의 재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 스리랑카

# 타밀호랑이의 분쇄가 스리랑카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리랑카군이 타밀일람해방호랑이(LTTE), 즉 타밀호랑이가 통제하던 지역에 대한 잔혹한 군사작전을 끝냈다. 타밀호랑이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살해됐다.

타밀호랑이가 분쇄됐으니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떠벌리는 언론들은 두 가지 점을 놓치고 있다.

먼저 타밀 지역에서 7천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타밀호랑이가 아니라 스리랑카군의 책임이다. 게다가 최근 TV뉴스에서 타밀호랑이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비춰진 난민들은 이제 악독한 스리랑카 정부가 만든 ‘재정착촌’에서 지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이 위기는 1983년 LTTE가 주도한 분리주의 운동 때문에 촉발된 게 아니다. 타밀족의 분리주의는 인구의 대다수인 상할리족 출신 지배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부추겨 온 차별과 학살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이다.

스리랑카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종족 간 분열지배 전술을 썼지만 실제 종족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영국에게서 독립한 뒤였다. 이 수법은 1906년 집마차꾼들의 파업에서 시작된 종족을 뛰어넘는 노동계급 단결의 전통에 맞서려는 시도였다.

반대 사례는 1912년 열차노동자들의 파업이다. 당시 관리인들은 상할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타밀 정서를 부추겼고 파업은 패배했다. 반면 1920년 종족을 뛰어넘어 단결한 열차노동자, 항만노동자의 파업은 승리했다. 1923년 총파업도 마찬가지로 승리했다.

## 박탈

1948년 독립과 함께 통합국민당(UNP)이 권력을 잡았다. UNP가 처음 도입한 조치 중 하나는 스리랑카에서 1백 년 넘게 거주하며 흉차 재배지에서 일해 온 [인도 출신] 타밀족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타밀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스리랑카에서 1천 년 넘게 살아 온 타밀족도 진짜 시민이 아니라고 암시하는 것이었다. 대입 시험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일어난 변화는 타밀족 중간계급이 정부 내에서 일자리 연기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1951년 UNP의 분열로 스리랑카자유당(SLFP)이 만들어졌고 이 당은 사회주의 정당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SLFP는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상할리족 우월주의를 내세웠다.

1956년까지 SLFP의 선거전략은 스리랑카의 불교적 전통을 앞세우는 것이었다. 상할리족의 다수는 불교 신자인 반면, 타밀족의 다수는 힌두교 신자다. SLFP는 또 상할리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밀족은 큰 시위를 벌이며 저항했다. 이들의 집회는 평화로웠고, 간디의 비폭력 저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혔다. 그럼에도 그들은 공격받았고, 전국을 휩쓴 반타밀 폭동으로 최소 1백50명의 타밀족이 죽었다.

1970~77년 SLFP와 다른 두 극좌파 정당이 연합해 구성한 공동전선 정부는 이보다 더했다. 이 정부는 국호를 실론에서 더 불교적 명칭에 가까운 스리랑카로 바꿨고, 타밀족에 대한 차별 수위를 높였다.

1977년 선거로 집권여당이 바뀌었지만 타밀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다시 전국을 휩쓴 폭동으로 타밀족 난민이 3만 5천 명 이상 생겨났다. 경찰은 직접 타밀족을 공격하거나 그들에 대한 공격을 도왔다.

바로 이때, 무장저항을 자신의 강령으로 삼은 LTTE가 부상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LTTE는 스리랑카 타밀족들 사이에서 유력한 정치 세력은 아니었다. 타밀족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면서 LTTE의 영향력이 커졌다.

상할리족 지배계급의 종족 우월주의와 스리랑카 좌파의 무능 때문에 타밀족은 대안으로 분리주의를 받아들이게 됐다.

타밀족 사회주의자 아 시바난단은 이렇게 말한다. “지독한 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억압, 남부에서 언론인들과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살해 등 LTTE의 군사 저항을 낳은 원인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켄 올렌데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번역 조명훈 기자



##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크리스 하먼이 국제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대응책과 이른바 ‘해결책’의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본다.

바락 오바마는 4월 20일 런던 G20 회담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G20 회담이 깊어가는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이번 회담의 결과는 오바마가 주장한 바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든 브라운은 이번 회담에서 1조 1천억 달러의 “국제 신용 · 성장률 · 일자리 복원 계획”과 더불어 총 5조 달러 규모의 “사상 초유의 재정 부양 방안”을 결정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회담 직후에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약속된 1조 1천억 달러에는 이전 내용의 재탕이거나 이미 추진 중인 방안이 담겨 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운용자금 5천억 달러 증액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2천5백억 달러는 앞으로 모아야 한다.”

어떻게든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논평가들조차 매우 비판적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리스트 윌포드 문차우는 “2년 전에 경제 위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세계 지도자들의 대응은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쳤다. 그런데 이번 런던 회담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번 회담의 결정들은 세계경제 위기 해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다른 칼럼리스트 마틴 윌포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G20 회담이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할 길을 열었는가? 아니다.”

그래도 회담 후에 주기가 상승했습니다. 오바마는 이제 “희망의 서풍이 비친다”고 말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벤 버נק는 경제 활동이 급격히 둔화한다는 “명시적 신호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바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연설한 바로 그날 이 기구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11개 주요 경제국을 살펴본 결과 모든 곳의 경제가 급격히 둔화한다는 유력한 지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09년에는 “OECD 국가들의 경제”가 평균 -4.3퍼센트 성장하며 2010년 말까지 “1990년대 초반 이래 처음으로” 실업률이 두 배로 뛰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에서는 61만 명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8퍼센트 하락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8.4퍼센트, 일본에서는 무려 38퍼센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지출이 얼마간 효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은행들의 파산을 막으려고 투입한 막대한 금액과 “경기부양 패키지”의 금액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경기부양 패키지”는 기업에게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될 시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OECD의 발표를 보면 이 “재량적” 재정 정책으로는 2009~2010년에 GDP가 고작 0.5퍼센트 성장합니다. 게다가 정부지출에서 “비재량적” 부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재량적” 재정정책**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 국민소득의 변화 및 경제 안정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

**정부 지출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는 위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기업들이 임금 동결이나 삭감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 애쓴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는 실업수당이나 사회안전망과 같이 실업의 증가와 함께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출입니다.

정부지출이 다소간 효과를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는 위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실업수당으로는 그 사람의 원래 구매력을 메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상품이 덜 판매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서 기업들이 임금 동결이나 삭감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 애쓴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임금 삭감은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을 위축시켜 그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양적완화는 무엇이며 무슨 구실을 하게 됩니까?**

양적완화는 은행과 기업에게 이자 없이 대출해 주는 정책으로, 실제로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효과를 냅니다.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 주고 기업은 이 돈을 생산에 투자하도록 고무하는 정책입니다. 양적완화는 금리를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사람들에게 저축할 유인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하지 않으려고 10원이라도 아끼려 한다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유동성”과 “지불 능력”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유동성 문제는 누군가에게 받을 돈을 아직 받지 못해 당장의 어려움을 결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양적완화”는 기업이나 은행에게 돈을 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불 능력의 문제는 받을 돈보다 빌린 돈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적완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파산한 은행들은 지불 능력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은행들은 가격이 오르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자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려고 돈을 빌렸습니다. 주택과 자산 가격이 떨어지자 은행들은 갑자기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은행이 파산하면 그 은행에 돈을 빌려 준 다른 은행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손실을 메울 만큼의 준비금(은행의 “자본금”)을 보유하게 하려고 은행에게 돈을 쥐어 줬습니다. 정부는 이런 양적완화 조치로 은행들이 대출할 기를 바꿨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이 성공할까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재간이 없다는 점이 이 체제가 미쳐 돌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각 은행의 수장들도 예전에 자기들이 대출해 준 돈이 얼마나 회수 가능한지, 그래서 다른 은행에 빚진 돈을 갚을 수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 런던 G20 정상회담 항의 시위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문제를 감지하더라도 그들은 이 비밀을 폭폭 숨기고 더 많은 돈을 빌려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뽐냅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의 손실규모 추정치가 다양합니다. 누구는 4천억 달러라고, 누구는 8천억 달러라고, 누구는 1조 6천억 달러라고 추정합니다. 미국 은행들의 손실액이 4천억 달러라면 이미 쏟아 부은 돈으로 은행권이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조 6천억 달러라면 더 많은 대형 은행이 무너지면서 위기가 질적으로 크게 악화할 것입니다.

일부 지배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은행 시스템 전반의 국유화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임스 베이커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베이커는 [자책서] “지금까지 제안된 정책들은 금융

시장의 자신감이 회복되면 은행들도 살아나리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이 틀렸다면 ‘좀비 은행’이 생기면서 미국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다”하고 말했습니다. 베이커는 은행의 주주들을 날려버리는 등 국가가 자신의 정치 철학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부분적인만 전체적인, 단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뭔가를 소유한다는 사상을 혐오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행의 주주들은 매우 강력하며 국유화 움직임을 기를 쓰고 저지하려 들 것입니다. 또한 사유재산이라는 ‘신성불가침

의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응이 두려워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자유주의자들’은 베이커와 공화당 일부도 불가피하다고 여길 정책조차 추진하기를 꺼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거대 은행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위싱턴 특파원 에드워드 무스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두고 “숨구멍을 트려고 청산 날 짜를 뒤로 미룬” 셈이라고 했습니다.

몬차우는 “지금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양책의 약발이 멎힐 때까지 기다리며 경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이른바 ‘관망 모드’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실업률은 치솟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언제 불가능한니까?**

체제 옹호론자들은 언제나 이전의 체제 위기가 모두 결국에는 끝났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려면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1930년대에 체제가 회복하는 데는 10년 동안의 경제적으로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부양 패키지의 불분명한 규모를 봤을 때 그들은 충격을 피하지 못할 듯합니다. 게다가 꽤나 다루기 힘든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가 회복되려면 대자본가 다수가 [생산에] 투자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을 이윤이 위험을 상쇄할 만큼 크다고 판

**자본가계급이 체제 자체가 낮은 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배계급 내부에 공공연하게 분열이 생기고 동시에 격분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정부들의 상이한 대응으로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단기적 거품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것이고,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더 적은 돈을 경기부양에 쓰면서 자국 자본들이 대미 수출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큼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 통화 가치의 국제적 하락에 기대 수출을 늘리려 합니다.

국내 경제에 기반을 둔 국내 대기업들뿐 아니라 심지어 초대형 다국적기업들도 생산 · 판매 · 수익에서 특정 국가 경제와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이들의 압력에 대응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들이 국제 경제의 균형을 재구축하려고 단일한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부양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요?**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위기는 국제적인데 반해 해법은 일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주요 요소 하나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영국, 이보다는 작은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 동유럽 국가들에서 정부와 개인들은 재화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차입금은 대부분 중국 · 일본 · 독일 같은 다른 나라의 이윤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경쟁 기업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거품 성장기 동안 은행들은 이 대출 · 대부기 영원이 순순환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기반을 둔 국내 대기업들뿐 아니라 심지어 초대형 다국적기업들도 생산 · 판매 · 수익에서 특정 국가 경제와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이들의 압력에 대응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들이 국제 경제의 균형을 재구축하려고 단일한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G20 회담 이전의 치열한 말다툼이 이를 보여 줍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 자국 은행 시스템의 영향력 회복에만 관심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수출만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위기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차승일

그러서 세계 지도자들은 특하면 “소비자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을 설득해 지갑을 열 수 있다면 불황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자본배하는 것을 환영한다. 애당초 노동자들이 그 부를 창출했다. 그러나 칼 맑스는 파소소비가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이라는 생각에 도전했다.

그래서 정성회담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까?

국민국가에 기반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정부의 능력은 그 정부의 국제적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이 점에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21세기를 “세로운 미국의 세기”로 만들려 했던 시도는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좌절하며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미국 전쟁광들도 오바마가 이란, 러시아, 심지어 베네수엘라와 쿠바에게도 유화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경제 위기 탓에 미국 자본가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미국 국가가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증파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파키스탄으로 확대하며, “훈련” 목적이라며 이라크에 5만 명의 병사를 유지하는 것이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다른 강대국들은 미국의 힘이 약해진 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러시아는 미국과 친한 옛 소련 공화국들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 합니다. 위기 때문에 국내 경제들이 파탄하면서 이 모든 지역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동, 동북아프리카에서는 언제라도 분쟁이 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월러리 클린턴은 원래 전쟁광입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찬성표를 던진 행동이 이를 증명합니다. 오바마도 똑같이 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을 폭격하면서 그는 이미 전쟁광이 됐습니다. 물론 그의 연사가 아직 부시보다는 덜 사납긴 하지만 말입니다.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위기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부 경제학자가 부분적 회복 뒤에 큰 폭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W자” 체제를 예견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자체를 곤경에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본가계급이 체제 자체가 낮은 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모르는 고전적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계급 내부에 공공연하게 분열이 생기고 동시에 격분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모색하는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유동적입니다.

**크리스 하먼은 《인내내설 소련식》 편집자이고, 국역된 책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민중의 세계사》 등이 있다.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동차 기업들은 또 새로운 기술 혁신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혁신적 기술이 경쟁자를 앞설 수단을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동차 과잉생산은 단지 사람의 필요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기에 굴라나니는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뿜어내는 구형 자동차들을 신형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가업자들은 이윤이 줄면 노동자들을 자르고 생산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더 어렵게 하고, 밑바닥을 향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 고장난 자본주의 ③

## 과잉생산인가 과소소비인가?



오늘날 세계는 팔리지 않은 상품들로 가득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09년 세계무역량이 10퍼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일본의 수출은 1년 세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현 위기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사람들이 물건을 충분히 사지 않아(과소소비) 불황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서 세계 지도자들은 특하면 “소비자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을 설득해 지갑을 열 수 있다면 불황도 곧 끝날 것이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벌고, 너무 많이 소비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똑같은 자들이 지금 노동자들이 돈을 충분히 쓰지 않아 경제가 문제라고 말한다. 어쨌든 무조건 노동자들 잘못이라는 거다.

좌파 진영에도 과소소비론자들이 있다. 이 이론은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보다 노동자들이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과소소비를 지적하는 좌파 경제학자들은 그 가치 중 일부를 자본가들이 이윤으로 챙기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을 살 충분한 돈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부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본 배하면 팔리지 않은 엄청난 상품을 처리할 충분한 화폐가 공급될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자본배하는 것을 환영한다. 애당초 노동자들이 그 부를 창출했다. 그러나 칼 맑스는 과소소비가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이라는 생각에 도전했다.

맑스는 과소소비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문제가 드러나는 한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근본적 문제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는 경쟁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과잉생산되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가들이 상호 경쟁으로 단단히 엮여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 지분을 둘러싼 끝없는 경쟁이 계속되면서 이윤이 창출되는 분야에 너도나도 투자하고 상품을 생산한다.

개별 자본가는 전체 시장을 장악하기 충분한 양의 상품을 생산한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생산한다. 이 과정은 경쟁자들을 따돌리려고 자본가들이 이윤을 투자하는 방식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특히 투자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빠른 기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맑스는 이를 “자본 축적”이라 불렀다. 자본 축적 때문에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경제 체제가 됐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는 가장 파괴적 체제이기도 하다.

자기 노동자나 경쟁자들을 기를 쓰고 쥐어짜지 않는 자본가는 더 적은 이윤을 얻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에 가장 먼저 투자한 자본가는 경쟁자를 누르고 시장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본가들도 동일한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윤은 결국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총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이 창출되는 분야에 몰려들어 투자한다. 이것은 상품이 팔리지 않고 쌓이는 ‘과잉생산’ 위기를 갑작스레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원료와 부품 등을 공급하던 회사들은 파산한다. 사장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자 소비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입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자본가들의 행동이 문제를 초래하고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이윤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이 과정을 살펴보자. 최근 몇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한 기술 발전이 있었다.

생산과정의 혁명적 변화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대폭 줄었다.

각 자동차 기업은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려고 경쟁보다 생산성이 높은 신기술을 도입하려 노력했다.

이번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영국에서 소수 자동차 공장이 생산하는 자동차 물량은 영국 자동차 산업이 황금기였던 1960~70년대보다 많았다.

신기술 도입의 결과로, 자동차 산업 생산은 이번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30퍼센트 초과 상태였다. 그럼에도 생산은 계속됐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또 새로운 기술 혁신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혁신적 기술이 경쟁자를 앞설 수단을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동차 과잉생산은 단지 사람의 필요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기에 굴라나니는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뿜어내는 구형 자동차들을 신형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없어서 쌓이는 상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기업자들은 이윤이 줄면 노동자들을 자르고 생산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더 어렵게 하고, 밑바닥을 향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자동차 과잉생산은 단지 사람의 필요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기에 굴라나니는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뿜어내는 구형 자동차들을 신형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가업자들은 이윤이 줄면 노동자들을 자르고 생산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더 어렵게 하고, 밑바닥을 향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자동차 과잉생산은 단지 사람의 필요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기에 굴라나니는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뿜어내는 구형 자동차들을 신형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가업자들은 이윤이 줄면 노동자들을 자르고 생산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더 어렵게 하고, 밑바닥을 향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 이상우 기자는 우석훈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다

지난호에서 이상우 기자의 우석훈에 관한 글 잘 읽었다. 이상우 기자는 우석훈의 제3부문(혹은 제3섹터), 혹은 사회 경제(혹은 사회적 경제) 논의에 주목했고, 이들의 확장은 실제로 우석훈이 《괴물의 탄생》에서 강조한 부문이다. 그런데 이상우 기자는 이것을 “이윤지상주의가 아니라 호혜, 연대, 증여의 원리에 기초해 운영되는 비시장 경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우석훈 자신은 제3부문이나 사회 경제를 “비시장적 경제”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사회 경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는 시장 기제와 비시장 기제가 결합된 것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우석훈이 지목한 사례 중 상당수, 예컨대, “[스위스] 소상공인연합”, “독일의 마에스트로들이 만들어내는 정밀기계와 소재산업” 같은 것들은 전혀 비시장적이지 않다. 그들은 시장, 즉, 미리 정해지지 않은 소비자에게 팔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집단이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별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는 아니다. 우석훈이 받아들이는 제1(국가 공공부문)·2(대기업)·3부문(사회 경제)의 구분은 대기업의 이윤지상주의도 싫지만, “부패했고, 비효율적이고, 좌파에서나 우파에서나 끊임없이 의심받

고 있는 국가”(《괴물의 탄생》, 107쪽)도 싫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유럽에서 상당수의 진보 인사들은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국가의 해체된 복지 부문을 다양한 제3부문 조직(사회적 기업, 자원 봉사 집단, NGO 등)의 활동을 통해 메꾸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의도는 선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복지 시장화의 한 단계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들도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을 내야하고, 작은 제3부문 조직들이 시장의 법칙을 바꿀 수도 없다. 따라서 당면해서는 시장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복지의 유지·확대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석훈이 한국에서 복지 국가 성립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3부문 논의가 이것과 과연 잘 조화를 이룰지는 의심스럽다.

이상우 기자의 글이 좀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상우 기자가 참여계획경제(즉,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에 비취 우석훈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대기업뿐 아니라 국가 공공부문의 대안으로 비시장적이지 않은 것을 가정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우석훈의 주장들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상우 기자의 글에서 또 다른 문제는 공정무역에 관한 논의다. 이상우 기자의 글에서 공정무역 부분이 차지한 분량을 보면, 이것이 우석훈 사상의

핵심 중 하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석훈은 《괴물의 탄생》에서 공정무역을 딱 한 번 지나가면서 언급했을 뿐이다. 또, 그의 강연을 취재한 기사들을 봐도 그가 공정무역을 강조했다는 언급은 전혀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우석훈 씨가 슬쩍 언급한 공정무역도 이상우 기자가 논평한, 민간 단체가 제3세계 생산자에서 ‘공정한’ 값으로 사들이는 물건을 선진국의 ‘윤리적’ 소비자들에게 파는 ‘공정무역 네트워크’는 아니었다. 사실, 공정무역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스티글리츠는 제3세계 발전에 필요한, ‘공정한’ 국가 간 무역 체제의 의미로 사용한다. 반면에 미국 민주당과 일부 미국 노조 관료들에게는 미국 같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수단이다. 공정무역 네트워크 논의에서도 옥스팜은 현존 무역체제를 보충하는 의미로 쓰지만, 어떤 이들은 탈상품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안 체제의 조석으로 본다. 나는 공정무역에 대해 지금까지 우석훈이 말한 것으로는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결론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논쟁할 때 상대방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논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김용욱

##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레프트21〉 5호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 마지막 부분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발에도 이 요구를 추진하자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 수준의 노동자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내수로 전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경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서민

의 희생으로 돌리려는 데 맞서 복지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싸워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내수 확대가 일시적으로 과소 소비 문제의 숨통을 틔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수 확대가 현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자본 간의 무질서한 경쟁과 이윤을 저하 경향이라는 자본주의 지병을 완전히 해결할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와 같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성휘

## 반MB 구호는 유효하다

최일봉 동지는 지난호 독자토론광장 글 “〈레프트21〉은 비판적 지지라는 전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에서 장호홍 기자가 쓴 〈레프트21〉메이데이 특별호의 헤드라인(“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에 대해서 “반MB라는 공식이 눈에 거슬렀”다며 단서를 달았다.

그 이유로 “진보 진영 안에서 그 공식을 애용하는 훨씬 더 큰 경향인 주요 NGO들과 NL 경향은 흔히 그 공식을 이용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필요성을 넘지시 언급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경계하면서도 “반MB” 구호를 계속 사용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에서 “MB가 하는 ~정책”이란 말을 쓰면 훨씬 더 높은 “반대경향”이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게다가 이명박이 대운하와 같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성소수자 차별 반대 내용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후보 시절 이명박을 지지했던 여러 이주노동자 단체들조차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받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시점에서 “반MB” 구호는 여러 운동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믿는다.

김재원

## 〈레프트21〉 4호 타이틀은 부적절했다

메이데이 특별 증면호인 〈레프트21〉 4호 타이틀은 “대량실업·실업·노동조건 악화·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노동자 파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였다. 그리고 1면 주요기사로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국유화를 요구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해야 한다고 기사를 실었다.

대량실업 등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파업과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확연하게 드러난 경제 위기 후 첫 메이데이를 겨냥한 신문타이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논설 내용(“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을 타이틀로 반영했어야 했다. 논설 제목도 괜찮다고 생각한

다. 특히 메이데이를 겨냥했다면 더욱 그렇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그 해결 방법으로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4호 1면 타이틀은 후자만 반영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일자리 문제를 세계 경제 위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쌍용자동차 같이 구조조정이 시작된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또 오바마나 이명박이나 몇 조 달러, 몇 백조원을 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만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는 인색하다. 당장에 1조 원이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을 수 있는데 이명

박은 전 국도를 삼질하는 데 약 30조 원을 퍼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제목이 더 적절했을 것 같다.

그리고 타이틀과 관련된 기사로 쌍용자동차를 실었는데 차라리 논설 내용이 1면 기사로 적절했을 것 같다. 쌍용자동차가 주요 쟁점인 것은 맞다. 대량해고 대상자가 2천6백46명이나 되고 주요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재계와 노동계 모두 물려설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1면 타이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와 쌍용자동차 상황이 아직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1면 주요기사로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모승훈

## ‘운동권 가부장제’ 기사를 읽고

〈레프트21〉 5호 기사 ‘‘운동권 가부장제’ 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견해’의 분석과 대안에 동의한다. 특히 여성 해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공동의 노력을 역설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

나는 기사 중 가사노동에 대해 세밀한 언급을 하나 하려 한다. 기자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남성의 ‘이익’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대체로 남성들보다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남성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만 표현하는 것은 여성이 처한 현실로부터 거리감이 느껴진다. 명절 때만 봐도 분명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십중팔구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도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사에 투여해야 할 것이다. 이 사회가 강조하는 모범적인 여성상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사까지 잘 챙기는 ‘하내이자 어머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가정 안에서 다소간의 편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 사회에서 남성이 얻는 편익이라는 것이 전체 남성들의 전체 여성에 맞선 협잡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확립돼야만 하는 노동력 재생산 구조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다음 날 혹은 다음 세대의 노동력이 재생산돼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이 비용과 노력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기 위해 시공을 조율한 고유한 ‘여성의 구실’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하내이자 어머니’로서 말이다. 따라서 여성 가사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진정한 수혜자이자 원인은 남성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 자본주의 체제의 가정에서 ‘남성의 이익’에 관한 페미니즘의 주장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현상만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남성의 이익’이라는 것은 고작 다음 날 혹은 다음 세대에 자본에 바쳐질 노동력을 남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편하게 재생산하는 과정일 뿐이다.

게다가 임금 삭감, 비정규직화, 해고 등으로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이 갈수록 참담해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나마의 편익마저도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현재의 고통스런 가사노동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려면 남성 노동자들과 어깨 결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저항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전체 남성에게 대항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FnM

## 나의 〈레프트21〉 판매 경험

〈레프트21〉이 창간되면서부터 나는 주위 동료들에게 판매를 시도했다. 특히 내가 활동하는 보건의료노조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좌파 언론 〈레프트21〉을 소개했다.

창간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신문”, “이런 신문은 많은 노동자들이 읽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나의 동료들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와 반민주 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상당했고, 이를 적절히 비판하는 〈레프트21〉을 칭찬했다. “〈레프트21〉은 〈한겨레〉나 〈경향〉보다도 더 분명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좀더 적극적으로 신문에 대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레프트21〉을 휴대하고 다녔다. 하루는 지방에 출장을 가다 휴게소에서 쌍용차노동자들을 만나 〈레프트21〉에 나온 쌍용차 기사를 소개하며 건넬 수도 있었다.

메이데이 집회에서도 〈레프트21〉을 적극 판매했다. 나는 병원노동자임을 밝히고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연대 투쟁이 필요함을 호소하며 판매했다.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병원노동자들, 이미 해고돼 싸우고 있는 급속노동자들 그리고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우는 언론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레프트21〉 60부를 판매했다.

자신감 있게 〈레프트21〉을 권한 결과, 매호 10여부를 동료들에게 판매했고 그중 5명은 〈레프트21〉정기구독자가 됐다.

〈레프트21〉은 경제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노동자 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이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레프트21〉을 권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다.

박미혜 보건의료노조 고대병원 조합원



## 존 몰리뉴의 맑스주의로 세상 읽기



##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존 몰리뉴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

이전에 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룬 칼럼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긴급하게 다뤄야 할 것 같은 주제들이 있어서 자선 문제를 다룬 글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이 글은 지난 2월에 쓰였다] 영국에서 특정한 자선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서 모든 사회주의자, 모든 혁명가가 — 사실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하게 됐다.

어떻게 해서 자선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는지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 에피소드 덕분에 나는 자선 문제를 다뤄야겠다고 확신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자선 문제에 관해 강조해야 하는 첫째 요점은 대부분의 경우 자선 단체는 자신이 다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옥스팜을 살펴보자.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는 것이 목표인 옥스팜은 전 세계에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영국에서는 가장 크고 성공적이고 유명한 자선 단체다. 2007~2008년에 옥스팜은 2억 9천9백70만 파운드[약 6천3백억 원]를 모금해서 2억 1천4백20만 파운드[약 4천5백억 원]를 썼다. 이 돈 자체는 꽤나 거액이지만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것은 빈곤 문제가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식량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몇 천억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선 행사 축에 들고 BBC가 저녁 내내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칠드런 인 니드’(Children in Need)[불우 어린이 돕기]는 약 2천만 파운드[약 4백20억 원]를 모금했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 한 군데에 투입된 정부 구제금융만 해도 2백억 파운드[약 42조 원]였다(‘칠드런 인 니드’ 모금액의 1천 배나 된다). 버락 오바마에 따르면, 2008년 말에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에게 지급된 보너스가 2백억 달러[약 30조 원]에 이른다. 2008년도 세계 군비 지

출이 1조 4천7백억 달러[약 2천2백28조 원]였고 그중에 7천1백10억 달러[약 1천77조 원]가 미국의 군비 지출이었다. 기타 등등.

물론 자선 단체 옹호자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할 말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단지 뭔가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좋다, 그러나 빌딩에 불이 났을 때 물총으로 불을 끄려 하거나(그것도 뭔가를 하는 것이기는 하다) 산불이 났을 때 물뿌리개나 정원용 분무기로 산불을 끄려 하는 것을 제대로 된 소방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자선 활동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적절한 소방차보다는 물총에 더 가깝다는 것이 진실이다.

## 자선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구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의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선의 문제점은 원조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선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구실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지배자들은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심지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을 때조차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 척하는 데 자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 정부는 비겁하게도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를, 특별하게는 가자 침공을 지지했으면서도 인도주의적 원조랍시고 겨우 2천만 파운드(또 2천만이다)를 약속하며 생색을 냈다.

각국 정부는 교육·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자선과 ‘자원 봉사’를 이용할 수 있고 흔히 그렇게 한다. 나는 병원이 새로운 구멍 설비를 도입하려고 모금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왜 군대는 모금을 하지 않아도 무기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묻곤 한다.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미사일 시스템을 갱신하는 데만 2백억 파운드(또 2백억이다) 넘게 필요한데도 이것은 모금하지 않고도 언제나 마련된다.

많은 자선 단체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들 자신이 상당한 관리 비용이 들고, 많은 활동가나 자금 모집책, 마케팅 관리자들에게 수지 맞는 직업을 제공하는 기업체가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엄밀하게는 불법적이거나 비밀스런 활동이 전혀 없더라도(가끔은 그런 활동도 있지만)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모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10만 달러[약

자선의 온갖 결점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동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관심을 갖거나 격려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기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자극이 있다.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은 좀 쏠사납다. 미국 최대의 자선 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갤러거의 연봉은 97만 3천 달러[약 14억 7천5백만 원]다. 이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경우에 특히 심각하다. 그런 곳에서는 NGO 활동가의 소득이 현지 주민보다 수백 배나 많다.

또, 폴 매카트니나 보노처럼 엄청나게 부유하고 유명한 자선 사업가들이 콘서트 등을 열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에 기부하라고 촉구한다. 예컨대, 보노의 자선 단체인 RED는 웹사이트에서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를 위해 2년 동안 1억 달러[약 1천5백억 원]를 모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실은 보노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 돈을 낼 수 있었다는 것과 그가 평생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선의 본질에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자선이 사회적·인도주의적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에 집중하고 자선의 수혜자들을 무기력한 수동적 피해자로 묘사할 뿐 저항이나 자기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근본적 신념은 빈곤과 인간의 타락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노동 대중 자신의 집단적 투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 평범한 사람들의 자선 단체 기부 동기를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나 이 모든 비판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자선 문제를 단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 정치의 문제로 다룰 때는 더욱 그렇다. 자선의 온갖 결점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동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관심을 갖거나 격려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기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자극이 있다. 예컨대, 내가 직장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 노숙자들을 위한 모금통을 들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다만 얼마라도 기부함과 동시에 왜 영국 같은 부유한 나라에 노숙자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런 자선 문제를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또, 스스로 도울 수 없거나 집단적 투쟁을 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도 많고 사람들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때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선이나 원조와 연대(사회주의자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사이에 만리장성이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원조 문제 또는 정부의 원조 부족이 정치적 연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했을 때 (영국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후련한 반응에 당황한 영국 정부는 애초의 인식한 원조 액수를 더 많이 늘렸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압력의 일부가 돼야 했다. 또, 2005년에 미국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쳤을 때 흑인과 빈민을 위한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이 조지 부시의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제 이 글의 서두에서 말한 상황에서 돌아가 보자.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긴급 원조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이 글은 지난 2월 초에 쓰였다]. 그러나 시온주의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BBC는 가자 지구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재난긴급구조위원회의 (기본적인) 호소조차 방송하기를 거부했다. 지속적인 친이스라엘·친시온주의 보도 뒤에 드러난 이 노골적인 편파성 때문에 가자 지구에 대한 원조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제 원조 문제가 됐다.

두 가지 일반적 요점으로 끝을 맺겠다. 첫째,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일반적 이론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원칙을 직접적 실천에 적용할 때는 단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맑스주의자들에게 진리는 결국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전반적 투쟁 과정에서 혁명가들은 노동 대중의 분노와 그들의 인도주의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둘 다에 관해 정치적 초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 이수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최근 보건 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

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민 모두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이를 치켜세웠다.

그러나 내가 본지 5호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요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추가 부담이 아니다. 이미 2002~2007년 사이에 보험료가 50퍼센트나 올랐는데도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

고 있는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사 노동자들이 양보한다고 해서 정부와 병원도 양보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4차 산별 중앙교섭에서 병원 측은 보장성 확대 요구에는 회의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린다는 데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또

이성재 정책위원회도 인정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보장성을 확대할] 생각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이런 제안은 정규직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두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와 기업주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논리로 이를 활용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명박이 2009~2012년에 부자들에게 감세해 주

겠다고 한 96조 원이나 수백조 원에 이르는 사내 잉여금,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금 8백조 원 등을 동원하면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무상의료도 가능하다.

물론 이런 재원을 이용하려면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주들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호중 기자 rednuc@left21.com



종합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진보신당은 5월 10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는 △국가·기업·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은 민주노동당에서 3년 전에 제안됐다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방안이다. 당시 반대자들은 이 방안이 기업주들의 ‘정규직 양보론’을 수용해 노-노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진보신당이 제시한 방안들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주와 노동

자 모두 납부해(급여의 0.9퍼센트씩) 축적되는 기금이다. 이 돈을 기업주가 책임져야 할 최저임금 인상에 쓴다는 발상은 또다른 ‘노동자 양보론’이다.

진보신당의 ‘2008 총선 22대 공약’을 살펴 보면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방안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추가 고용을 하기 어려운 취약 기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이 이렇게 주인 없는 싼짓돈 취급 받는 것은 기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중투쟁을 회피하려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연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고갈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최저임금 지원에 사

용하는 것은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고약하게도 지난달 말 이명박 정부 역시 고용보험기금 중 2조 1천1백57억 원을 본래 용도 외 실업대책 추경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에서 보듯이 정부와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얻어낸 조그만 성과마저 되돌리려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이 함께 양보해서 취약 계층을 돕자는 발상은 공상에 가깝다.

진보신당이 이런 양보안을 내세우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이라도 써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업률 자체가 완화되고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험이 사라지면서 내수(국내 소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현재 실업자 급증으로 여력이

고용보험기금을 최저임금 인상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또다른 ‘노동자 양보론’이다.

3~4조 원도 안되는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충분한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을 이루기는 힘들다. 기업주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대안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과 이상호 금속노조 연구원 등은 사회연대전략이 노동계급의 내부 연대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양보가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의식은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할 때만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초점을 계급 내 분배가 아니라 계급 간 분배에 정확히 겨냥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계급 일부가 먼저 양보하자는 ‘선한’ 의도는 계급 간 불평등과 계급 내 차별이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하는 문제를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 양보론’ 같은 ‘불량한’ 결과를 막을 수 없다. 사회연대전략이 결국 고통분담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진보신당의 창당 후 첫 선거 승리와 원내 진출은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했다. 진보신당이 원내 진출 후 첫 정책으로 노동자 양보의 사회연대전략을 채택한 것은 그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

김문성



## 리뷰

우원석 영화칼럼

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영화

몇 년 전 어느 단편영화제에서 예비심사를 맡은 적이 있다. 보름 동안 무려 삼백여 편의 영화들을 봐야 했는데 고된 작업이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두 주 넘게 영화만 보고 있자니 몸이 힘들었다. 또 다들 나름으로 정성껏 만들었는데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했으니 마음도 불편했다. 더구나 내가 예심을 맡은 부문이 하필이면 사회 드라마 섹션이었다. 어두운 현실, 소외된 인간, 비극적인 역사 등을 다루는 영화들 일색이었다. 심사하는 내내 기분까지 우울했다.

그런데 예심을 하며 조금 놀랐던 점이 있다. 현실 비판적인 이런 영화들에서 아이,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캐릭터들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나 노인들이, 필요할 때면 너무 쉽게 등장하거나 불쌍하게만 묘사되곤 했다. 아이나 노인은 영화에서 관객의 동정을 쉽게 불러일으킨다. <워낭소리>(2008)를 보라. 노인의 얼굴은 카메라가 슬쩍 비추기만 해도 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점에 기대는 건 영화적으로는 게으르고 창조적이지 않다.

여성 캐릭터를 쉽게 소모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꼭 여자가 성폭행 당하거나 잔인하게 짓밟히곤 했다.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인상 깊게 하려는 것인 듯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유 - 여성을 순수함으로 치환하고 이런 순수함이 파괴된다는 식 - 는 한물간 옛 소설들에나 어울릴 법한, 낡고 식상한 상상력이다. 또 여성 관객 처지에서 보자면 당연히 불쾌할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영화들이 백이면 백, 다 남자 감독의 작품들이었다.

## 사회적 약자 캐릭터 남용하기

이런 예는 5·18 광주와 관련한 장편 영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18 관련 영화들은 가장 치열한 작가적 의식의 산물이다.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다루는 창작자의 자의식이 그 깊이나 강도 면에서 다른 영화들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도 약자, 특히 여성 캐릭터를 다룰 때 종종 위와 같은 약점을 드러낸다.

<부활의 노래>(1990)나 <화려한 휴가>(2007) 등은 영화적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니 논외로 하자. 물론 <부활의 노래>는 허술하고 진부하지만 시대적 정황이 부여한 나름의 궂음이 있다. 반면 <화려한 휴가>는 액션 팝콘 무비로는 그럭저럭이지만 5·18 영화로는 민망할 정도로 격이 떨어진다. 솔직히 관람을 권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장선우 감독의 <꽃잎>(1996)을 우선 언급할 만하다. <꽃잎>은 장선우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과 지금은 가수로 유명한 배우 이정현의 신들린 연기가 어우러진 수작이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소녀를 순수함으로 치환하고 그녀의 수난을 통해 비극을 증폭시키려 했다는, 낡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2000)도 마찬가지다. 이 영화도 수작이지만, 주인공 영호(설경구)의 타락이 광주에서 어린 여학생을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설정에는 <꽃잎>과 같은 종류의 진부함이 있다.

여성주의적 논의가 활발한 요즘에는 이와 관련해 확실히 변화가 있다. 역시 5·18 관련 영화랄 수 있는 임상수 감독의 <오래된 정원>(2007)이 대표적이다. 영화에서 여주인공 윤희(염정아)는 역사의 희생자나 수동적인 보조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씩씩하며 능동적인 미혼모다. 여성 캐릭터의 이런 변화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취약점을 드러낸다. 영화는 80년대 운동의 처절한 - 너무 처절했기에 때로는 비이성적이기도 했다 - 면들에 대해 이해하거나 동조하기보다 적당히 거리감을 유지하는 윤희의 관점에 무게를 둔다. 이것이 건조한 연출 스타일과 어우러져, 영화가 80년대 운동 일반에 대해 냉소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영화의 완성도를 정치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치적 의식이 강한 영화에서 정치를 빼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광주항쟁 30주년을 앞둔 요즘, 이 모든 약점들을 극복한 영화, 특히 5·18 관련 영화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우원석 영화감독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운동으로 창출된다.

사진 이미지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촛불 시위에서 입이 닳도록 부른 <헌법 제1조> 노래 가사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과 비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모두 들어 있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의 장점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참히 짓밟는 ‘문명 역주행’ 정부라는 것을 헌법에 비춰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헌법 제1조는 ‘존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당위’를 선언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이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시민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 실무자들을 구속한 일, 군 장병들에게 불온도서 목록을 내려 보낸 일, 국가보안법, 미네르바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 등 수많은 일들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목 조목 지적한다.

저자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비슷하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치르지 않았다”며 민주공화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불’ 하려면 위대한 시민 행동이 필요하다고 옹계 지적한다. 이 책의 제목이 ‘후불제 민주주의’인 이유다.

그러나 이 책의 2부 ‘권력의 실재’에서 헌법의 이상과 현실은 격차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를 합리화한다.

유시민은 “참여정부는 경제 양극화, 보수 편향의 담론시장,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거리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 양극화’를 한층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보수 편향의 담론시장’을 문제삼지만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개폐, 언론 개혁 등에서 우익의 압력에 거들 타협해 우익을 강화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

서 재편’ 속에서 이라크 자이툰 파병을 결정해 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개혁 실패의 근본 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기반과 성격 때문이다.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은 자유주의적 자본가들과 중간계급 지식인, 일부 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지도자들까지 아우르는 다계급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 선출되지 않은 자들에 굴복한 노무현

저자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 시절 민주주의라는 주제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쓸쓸한 산장의 여인’처럼 되어버렸다”고 했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원천봉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자이툰 파병을 강행했다. 신자유주의와 친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

유시민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교체될 일도 없는 최강 권력 보수 언론”과 “선출되지 않는 시장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이 사실이 노무현의 개혁 실패를 정당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선출되지 않은 자들에 쉽게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시민은 보수 한나라당에 맞서려던 상이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열린우리당 같은 정당을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양한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진보 세력이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 위기 시기에 지배계급의 일부를 포함하는 다계급 정당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처럼 파산할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 보수 한나라당에 일관되게 맞서고 진정한 민주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이다.

우익의 준동으로 탄핵된 노무현을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으로 구출했을 때 정작 열린우리당은 저항 운동과 거리를 두려 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보수 우익보다 대중 운동을 더 두려워한다.

또 계급협력 정치는 자유주의적 자본가들과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동자 투쟁을 어느 수준에서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노

동자 계급의 정치의식 발전을 가로막는

데 일조할 뿐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자본가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따라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맞서려면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독립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노무현 개혁의 실패와 유시민의 이상인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의 한계는 헌법 자체의 모순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은 계급 질서를 옹호하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시민은 헌법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며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사적 소유를 옹호”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거나 국유화 투쟁을 벌일 때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탄압하는 일도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저자는 “민주공화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체제”라며 “법률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부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의 재산과 이윤을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가능한가?

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 이 때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란 자본가들의 이익과 안녕을 뜻한다.

“헌법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타날 관계법을 지시하고 있다. 일반 조항 속에서 나타난 자유와 유보 조항 속에 기록된 자유의 폐기가 공존한다. 헌법의 조항들은 그 자체에 반대 명제를 담고 있다.”(칼 마르크스의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중에서)

유시민의 이상인 민주공화국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이지 노동자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결합돼야 한다. 자본가들의 경제 권력과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해 사회의 부를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온전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김은영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년 국제학술대회

## 대안세계화 운동 이념과 전략의 국제비교

일시: 2009년 5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서울 동교동 림나이 빌딩 10층 대회의실

주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민주노동당 부설 세세상연구소, 서울이웃민치과  
문의: Tel.055-751-5184 | Fax.055-751-6650 | http://iss.gnu.ac.kr



칼럼/논설

박상표 칼럼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저 상식일 뿐이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중세의 연금술 같은 속임수 홍보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호박에 줄 긋기 연금술은 낡것 그대로의 유지함이 드러난다.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민주학살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정의사회구현’을 국가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뻔뻔스럽고 위선적인 구호가 전국의 관공서에 붙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고라는 내시가 진시황의 큰 아들 부소를 죽이고서 만만한 호해를 후계자로 내세운 다음에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황제 앞에 사슴을 가져다 놓고선 “말을 바치겠다”고 한 ‘위록지마(爲鹿指馬)’의 옛 이야기와 판박이로 똑같았다. 결국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형진압으로 내란과 반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수천억 원 비자금을 조성했던 5공 비리가 드러나 2천2백5억 원의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훗날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1천 원이라는 발언으로 민주화운동과 노동해방운동으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깨끗하게 살아온 민증을 다시 한 번 옷겨주시는 팬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지금 돌아켜보면 코미디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서는 엄혹한 현실이었다. 거대기업과 자본가들의 호박에 줄긋기 연금술은 좀더 정교하게 진실을

은폐한다. 몬산토와 신젠타 등 거대기업들은 유전자조작식품(GMO) 반대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나자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계업계는 조류독감이라는 용어 때문에 닭값과 달걀 값이 떨어졌다고 하여 언론과 정부에 ‘조류 인플루엔자(AI)’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돼지독감이라는 용어 때문에 돼지고기 값이 떨어졌다는 양돈업계의 주장에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돼지 인플루엔자(SI)’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그것도 모자라 아예 돼지라는 글자를 쏙 빼고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낯설고 생소한 용어를 고안해 냈다. 스미스필드, 카길, 타이슨푸드 등 다국적 거대 양돈기업의 이해가 그대로 반영된 이 용어는 그야말로 ‘돼지독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셈이다. 한편 온몸으로 살기가 느껴지는 MB정권의 공간 통치 아래에서 또다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진부하고 유치하고 식상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살기와 코미디**  
첫 번째 코미디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어느새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둔갑해 삽질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두 번이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위선적인 구호 속에 슬그머니 4대강 정비 사업을 끼워 넣었다. 두 번째 코미디는 영리병원을 투

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의료민영화를 밀어 붙이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미래는 멕시코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왜 유독 멕시코에서만 돼지독감 사망자가 대량 발생했을까? 멕시코는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세계 4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극도의 시장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태다. 멕시코의 상위 4퍼센트에 드는 부유층은 INGA와 GNP와 같은 고급의 사설 의료보험서비스를 받고 있다. 인구의 46퍼센트 가량을 차지하는 노동자, 공무원, 멕시코석유공사 직원 등은 질이 낮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0퍼센트의 가난한 일반 국민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방 혹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자신의 돈으로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하루에 몇 달러도 벌기 힘들어 끼니를 굶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1박 2일짜리 돼지독감 치료제를 구입하기란 사막에서 우물 찾기보다 힘든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멕시코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과 외화벌이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 번째 코미디는 교육 민영화, 교육 영리화를 교육서비스 선진화로 이름을 바꾸어 공교육을 이용해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과실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외국 사학들이 국내에서 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한다. 네 번째 코미디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여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2MB 정부는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비정규직법 때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고용정보원 등의 분석을 보면, 일자리 감소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파견업무를 확대하여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일 뿐이다. 고령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줄이고,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사용자에게 무한한 해고의 자유를 주는 것은 “자본가 천당! 노동자 지옥!”을 만드는 신자유주의 종말교 교리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농어업 선진화, 공기업 선진화, 방송 선진화 등 MB정권의 호박에 줄 긋기 코미디는 얼핏 보면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에 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선진화’라는 단어 하나로 계속 우려먹는 주파수가 고장 난 라디오일 뿐이다. 삽질경제를 녹색성장으로 우기는 MB씨가 “대통령 퇴임 후에 녹색환경운동이 꿈”이라며 최근 29만 1천 원짜리 큰 웃음을 하나 던져 주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상식적인 꿈은 MB씨가 엉뚱한 데서 괜한 삽질을 하기보다 그저 명박도에서 열심히 호박에 줄 긋는 연습이나 하며 지냈으면 하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으려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지난주 두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오바마의 주장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 줬다. 하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오바마는 이라크 수감자를 괴롭히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번복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순전히 미국 군대의 안전을 염려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군장성들의 압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오바마가 조지 부시 정부 시절에 테러 용의자들의 고문을 허용하는 메모를 작성했던 전직 관리들을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왔다 갔다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오바마는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 즉 9·11 이후 부시가 선언한 전 세계적 비상 사태를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과거 부시를 도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벌인 국가안보 기구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바마는 고문 지시 메모를 공개하기 앞서 CIA 본부를 방문해 비밀 공작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필요로 하는지 강조한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오바마가 아프가니스

탄에서 어떤 작전을 펴려고 하는지 보여 주는 것이었다. 지난주 월요일(5월 11일)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이제 겨우 임명된 지 11개월 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맥키어너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게이츠는 맥키어너의 경력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통명스럽게 답했다. 게이츠는 이 해임이 전략의 변화와 연결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스탠리 맥크리스탈 중장이 맥키어너를 대체할 것인데, 그는 부시 정부에서 도널드 럼스펠드가 국방장관일 때 많은 지원을 받았던 합동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 변화 뒤에는 틀림없이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이 있을 것이다. 그는 2007~2008년 이라크 ‘증파’를 기획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 ‘아프리카의 빨’ (에티오피아·지부티·소말리아 3개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속칭)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을 포괄하는 중부사령부 지휘관이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결정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숫자는 4만 5천 명으로, 올초보다 1만 3천 명이 늘었고, 올해 말에는 6만 8천 명에 이를 예정이다. 그러나

맥키어너는 전형적인 군인이다. 그는 2003년 부시와 럼스펠드가 너무 적은 육군을 이용해 이라크를 침략했다고 비판한 장군 중 한 명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현재 적용중인 [페트레이어스의] 대한 전략의 뼈대를 이렇게 요약했다. “페트레이어스 전략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저항 집단들을 전투성 수준에 따라 수평으로 배치해 보자. 맨 왼쪽에는 ‘타협 가능한’ 극렬분자들이 있다. 미국이 그들을 길들일 방법은 없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좀더 유연하고 ‘타협 가능한’ 집단에 가까워질 것이다.” “페트레이어스는 이라크에서 왼쪽 집단을 오른쪽으로, 즉, 극렬분자들을 미군의 돈을 받는 부족 민병대로 변화시켰다. 그러지 않은 광신도들은 미군 특수부대의 ‘생포하거나 죽이는’ 작전의 표적이 됐고, 맥크리스탈이 이 작전을 지휘했다. 이것은 강경책과 화유책을 결합한 전략이다. 무력을 사용해 그 지역을 확보하고, 그 뒤 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좀더 부드러운 대(對)게릴라전 수단들을 사용하고 경제를 재건한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페트레이어스의 계획은 오바마의 결정으로 추가 파병된 2만 1천 명을 이용해 올해 적을 강하게 치고 나서 탈레반 연합이 분열하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미군이 남부의 탈레반 거점을 공격하면서 폭력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페트레이어스가 ‘카탈레온 게릴라’라고 부른 집단이 조금씩 분열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많은 대게릴라 전략처럼 이 전략도 정치를 빼먹는다. 부시 정부 때 국방부에서 일한 셀레스트 딘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전투를 멈추고 타협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라크에 제한적이지만 안정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탈레반도 그럴까? 솔직히 의심스럽다. 그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고, 단지 급진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과거 승리의 경험에서 비롯한 자신감이 있다. 이그나티우스가 지적하듯이 오바마는 지금 “그의 대통령직을 결코 ‘제국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

논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노동유연성” 강화, 즉 착취 강화가 최대 국정 과제라고 했다. 벌써부터 해고와 임금 삭감(과동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를 수 있다. 가령, 화물·건설·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이런 투쟁들은 가연성이 상당히 크다. 다른 작업장들로 그 투쟁이 확산될 수 있고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런 발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투쟁과 경제 위기가 필연적 의존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쟁이 확대·발전할 잠재력을 봐야 한다. 이런 시기의 특징은 투쟁의 최초 부활 조짐과 급격한 고양 사이 기간이 평상시와는 달리 급격하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5월 16일 노동자대회 직후부터 화물연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도 그래서다. 20일에 정부가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도심 시위의 원칙적 불허를 결정했다. 국가 기구가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 계급 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저들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우리 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저항하거나 파업할 수 없다’는 정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리 되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살던 집에서 쫓아내고 마침내 미래를 위협하는 체제의 뒤틀린 우선순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선전포고’**  
그러나 경제 위기 때문에 지배자들도 취약하다. 이명박 정부는 수백 조 원을 퍼붓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블랙홀처럼 돼 가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8백조 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의 투자 주문을 자본가들이 간단히 거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파뿐 아니라 우파로부터도 비판을 받는다”고 했다. 심지어 우파 경제지 <매일경제>도 “한국 경제를 밀어줬던 세계화와 친시장주의는 이제 추억일 뿐이다.”(5월 4일지)를 머리기사를 뽑을 정도다. 경제 위기는 정치 위기로 심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내 분열의 골이 깊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으로 간주된 4·29 재보선 와중에 박근혜가 파란 색 한나라당 점퍼 대신에 빨간 점퍼를 입고 대구 행사에 참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회복 불능 상태다. 특히,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 내 분열의 골은 더 패였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탄압 강화가 위기의식의 발로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저항을 조직해야 할 때다.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깔려 압사당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탄압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면 투쟁 의지와 자신감이 증대될 것이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리: )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쌍용차 대량해고 저지 투쟁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라

지금에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의 적기'라며, 이명박이 직접 대량감원과 노조탄압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해고 작업장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부문에 미칠 파급력을 볼 때 전체 노동자와 기업주들 모두에게 중요한 싸움이다.

쌍용차 사측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며 대량해고 강행의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장관 이영희도 "쌍용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쌍용차 사측은 현재 대량해고를 앞두고 저항을 분산시키려고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고작 2천만 원 선인 쥐꼬리만 한 퇴직금도 문제거니와 여러 사례가 보여 주듯 복직이 불가능한 '절망퇴직'이다.

이런 '희망퇴직'에 대한 거부감을 잘 아는 사측은 몇몇 부서를 분사해서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어차피 해고자 명단에 들어 있으니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분사되는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대량해고된 정규직 노동자들 일부를만 분사된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최근 용역강제 4백여 명을 고용하는 등 향후 벌어질 투쟁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돈은 없지만 용역강제를 고용할 돈은 있는 것이다.

## 투쟁의 기회

사측이 이처럼 차근차근 공세를 강화하는 동안 쌍용차노조 지도부는 전면 파업 돌입을 머뭇거리려 왔다.

이 틈에 최근 생산직 노동자 8백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지금 공장 분위기가 술렁이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희망퇴직 접수에 맞춰 굴뚝농성을 시작하는 등 노조의 행동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굴뚝농성은 파업이 불가능한 비정규직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주로 택하는 무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만한 실질적인 단체행동이다. 그런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자포자기하며 희망퇴직을 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시급히 전면 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것은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크나큰 실수였다.

더구나 다소 자신감을 얻었을 사측이 재차 희망퇴직 접수를 시도할 수 있다. 빈틈을 감지한 정부와 사측이 더 과감하게



대량해고 반대 집회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 - 이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투쟁을 미뤄선 안된다

사진 임수현

대량해고를 밀어붙일 수 있다.

지금 사측은 이미 나와 있다는 '해고자 명단'을 쥐고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이간질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즉시 공장 점거 파업을 조직해서 사측의 공격에 전면적으로 맞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장 정상화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달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직 현장 동력이 불충분해서 점거 파업은 이르다는 일각의 주장은 틀린 얘기다.

현장의 동력은 부분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거듭하며 높아지다가 전면 파업을 늦추고 희망퇴직이 진행되면서 일부 가라앉은 것이다. 투쟁의 타이밍을 놓쳐서 스스로 현장 동력을 갉아 먹은 후, 나중에 현장 동력이 없어서 투쟁하기 어렵다고 핑계 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지난주 분사화 대상으로 분류된 시설팀과 협정근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투쟁기금을 조성하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가족대체위는 물론, 주요 민주파 '현장조직'들 대부분과 경기지역공동투쟁본부, 지역 민주노동당 등도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투쟁에 나섰다. 무엇보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조합원 4천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도부의 파업 돌입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화물연대 파업 결의와 5월 16일 대전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투쟁의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측과 정부를 압박할 만한 전면적인 파업을 조직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따라서 즉시 전면적인 점거 파업에 들어가면서 금속노조와 자동차 3사 노조 등에 적극적으로 연대 파업을 호소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을 시작하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즉각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점에서 화물연대 파업 결의 이후 '민주노총 파업 시기'를 앞당기겠다'던 임성규 위원장이 하루 만에 노정교섭을 제안하며 일종의 '냉각기간'을 설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노총·금속노조·자동차 3사 노조 지도부는 쌍용차 대량해고에 맞서 연대 투쟁과 파업을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과 함께 올해 노동자 투쟁의 뇌관이 되고 있는 쌍용차 투쟁의 승리를 위해 전체 운동 진영이 적극 연대해야 한다. 이 투쟁에서 우리 측이 승리하면 앞으로 이어질 이명박 정부의 온갖 반노동·반민주적 공세에 파열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중남 자본의 위기 전야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 이미진

10개월짜리 행정 인턴 양산, 2012년까지 3만 5천 명 감원, 대졸 신규 입사자 초임 삭감, 노사간 단체협약 무시, 아웃소싱 확대, 공공서비스 사유화 등.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한답시고 추진하는 일들이다. 지난해 촛불 항쟁에 가로막혀 중단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선진화'라고 이름만 바꿔 고스란히 추진하면서 이명박은 공공기관에 낙하산들도 마구 떨어뜨렸다.

철도공사 사장은 2005년 FTA 반대 시위 폭력 진압 과정에서 전용철 열사를 죽인 책임자 허준영이고, 가스공사 사장은 현대그룹 시절 이명박 밑에서 사장 노릇을 했던 주강수다.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깨달았듯이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노동자 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악화와 공공요금 폭등을 낳을 것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드디어 저항과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철도노조, 발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5천1백15명 인력 감축안을,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들은 1천5백70명 정리해고안을, 가스공사 역시 3백5명 인력 감축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5월 27일부터 2박 3일 상경 투쟁을 벌인다. 이날은 건설노조가 상경해 파업 투쟁을 시작하는 날이다. 발전노조와 가스공사노조는 30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면서 대량해고를 하는 정부, 정규직은 해고하면서 1백만 원짜리 행정 인턴을 늘려 일자리 늘린다는 정부, 공공서비스를 지키려는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맞서려면 파업 등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2002년에도 철도·발전·가스 연대 파업은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했다.

따라서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건설노조와 철도·발전·가스노조의 투쟁과 파업이 결합되는 것만큼 효과적인 '공기업 선진화' 저지 방안은 없을 것이다.

김문성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십시오

이명박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해고하는 것(노동유연성)이 국정 최대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부자 대통령의 이 소신은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78명의 해고와 박종대 열사의 죽음을 낳았고, 2천4백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 5천1백15명의 철도노동자 감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칼바람을 살갓으로 느끼

고 있는 화물연대, 쌍용차, 건설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부자들의 대변자 조종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주의 광고에 의존하는 개혁언론들도 기껏해야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언론도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고무하고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레프트21〉은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편에서 투쟁을 고무·지지하고 또 날로 악랄해지는 탄압에 맞선 방어운동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신문 〈레프트21〉이 더 많이 보급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레프트21〉의 후원회원이 돼 주십시오.

후원 관련 문의는 02-777-2792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www.left21.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